



2022년 제2차 KICCE
육아정책 연구생태계 네트워크 포럼

“윤석열 정부의 육아정책 국정과제 이행 방향”

2022. **12. 9.**(금) 14:00~16:00

서울중앙우체국 21층 스카이홀

주최: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2022년 제2차 KICCE 육아정책 연구생태계 네트워크 포럼

윤석열 정부의 육아정책 국정과제 이행 방향

● 개요

- 일시: 2022. 12. 9(금). 14:00 ~ 16:00
- 장소: 서울중앙우체국 21층 스카이하늘(서울 중구 소공로70)
- 주제: 윤석열 정부의 육아정책 국정과제 이행 방향
- 주최: 육아정책연구소

● 프로그램

시간	내용
14:00~14:05	개회 및 국민의례 사회 : 이윤진 본부장(육아정책연구소 기획조정본부)
14:05~14:15	환영사 박상희 소장(육아정책연구소) 축 사 나경원 부위원장(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고영인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14:15~14:20	▶ 참석기관 소개
14:20~14:30	▶ 2022년 육아정책연구소 임신·출산 정책제안 공모전 결과 보고 이재희 팀장(육아정책연구소 저출생·육아지원연구팀)
14:30~15:10	▶ 주제발표 1 : 새 정부 육아정책 국정과제에 대한 국민의견 김나영 센터장(육아정책연구소 데이터연구센터) ▶ 주제발표 2 : 부모급여 제도의 쟁점 및 정책과제 박은정 부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미래교육연구팀)
15:10~15:50	▶ 종합토론 좌장: 문무경 실장(육아정책연구소 국제교류·데이터정책연구실) ※ 가나다 순 이병래 회 장(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장화정 본부장(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보호본부) 전효정 회 장(한국아동학회) 정정희 회 장(한국유아교육학회)
15:50~16:00	질의응답 및 폐회

환영사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장 박상희입니다.

오늘 '2022년도 제2차 육아정책 연구생태계 네트워크 포럼'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연구소는 지난 2018년부터 정부부처, 연구기관, 학회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육아정책 연구생태계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연구소 핵심 연구 영역에 대한 선제적 정책 이슈 발굴과 대응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올해 새 정부 출범 후 발표된 국정과제와 관련하여 오늘은 '윤석열 정부의 육아정책 국정과제 이행 방향'을 주제로 향후 육아정책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올해 저희 연구 사업의 내용을 토대로, '새 정부 육아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과 '부모급여 제도의 쟁점 및 정책과제'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연구소 연구생태계 네트워크 소속 전문가 분들께서 심도 있는 토론과 함께 차기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정책에 대한 좋은 의견도 주실 예정입니다. 또한 현장의 정책제안을 수렴하기 위해 올해 우리 연구소에서 수행했던 "임신·출산 정책제안 공모전" 결과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주제발표를 해주실 김나영 데이터연구센터장과 박은정 부연구위원, 공모전 결과를 공유해 주실 이재희 저출생·육아지원연구팀장, 그리고 토론을 위해 참석해 주신 이병래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장님, 장화정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보호본부장님, 전효정 한국아동학회장님, 정정희 한국유아교육학회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 의미 있는 자리를 위해 축하의 말씀을 보내주신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만 3년이 되어가는 코로나19 감염병과의 대처 속에서 우리는 교육과 보육의 위기, 아동학대 등 우리 아이들을 키워내는 중요한 일을 해내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저출생과 관련된 문제도 꾸준히 고민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육아정책 국정과제 이행 방향을 논의하는 것은 앞으로의 육아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포럼이 현재를 듣고 미래를 내다보는 의미 있는 토론의 장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상희 소장
육아정책연구소

축 사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나경원입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육아정책연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영유아 보육교육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계신 박상희 소장님과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포럼을 준비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2차 육아정책 연구생태계 네트워크 포럼에서 “윤석열 정부의 육아정책 국정과제 이행 방향”에 대한 논의를 개최하시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육아정책은 저출산 문제와도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경제·사회·문화·가치관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관점만으로 대응할 수 없습니다.

경제적인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중요하고, 가정과 직장, 사회 전반의 자녀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장기적인 관점도 필요합니다.

제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나서 가장 고민하는 것 중 하나가 결국은 어떻게 하면 출산양육 부담을 줄여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사회를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사회로 만드느냐, 즉 어떻게 고령사회를 잘 대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육아정책, 즉 출산·양육·돌봄 관련 각종 정책이 있었고, 수백조의 예산을 썼지만 체감도가 높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자세한 예산을 살펴보면 진짜 저출산 예산으로 말할 수 있는 가족지원 예산은 OECD 평균인 2.4%보다 1%나 낮은 1.4%에 불과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문제를 미룰 수 없습니다. 작년이 우리나라 인구의 데드크로스를 맞이한 해였습니다. 한마디로 사망자의 숫자가 출생아의 숫자보다 많아진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문제는 정부만의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국민 모두, 특히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해결해 나가야 하는 우리 공동의 문제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현재의 정책들을 검토하면서 개선해나갈 부분을 개선하고, 과감한 정책들도 함께 고민하며 만들어갈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모든 아동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의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고, 사람들의 생각에 변화의 바람을 불어오는 것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오늘 포럼에서 우리 정부에서 우리나라 아동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치열하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모아주신 지혜를 담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포럼을 준비해주신 분들과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경원 부위원장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축 사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 단원갑 국회의원 고영인입니다.

옷깃을 여미게 하는 추위가 하루가 다르게 강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한 많은 사건이 있었지만, 그럴수록 시린 자리가 없도록 주변을 둘러보고 서로를 보듬는 계절이 되길 바랍니다.



〈2022년 육아정책연구소 제2차 육아정책 연구생태계 네트워크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늘 포럼을 주최해주신 육아정책연구소 박상희 소장님과 빈틈없이 행사를 준비해주신 실무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사회를 맡아주신 이윤진 기획조정본부장님과 2022년 육아정책연구소의 정책 제안 공모전을 소개해주신 육아정책연구소 저출생·육아지원연구팀 이재희 팀장님, 주제발표를 맡아주신 육아정책연구소 데이터연구센터 김나영 센터장님, 미래교육연구팀 박은정 부연구위원님, 토론자로 함께 참여해주신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이병래 회장님과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보호본부 장화정 본부장님, 한국아동학회 전효정 회장님, 한국유아교육학회 정정희 회장님 정말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은 국민께서는 이미 저출생 문제가 우리 사회 미래 세대의 문제가 아닌 현세대의 문제라는 점에 깊이 공감하고 큰 위기감을 느끼고 계십니다. 저출생 문제는 성차별과 노동 격차, 수도권과 그 밖에 지역 간의 경제 활력의 차이, 세대 갈등 등 다양한 사회 문제가 망라되어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그중에서도 당사자들이 체감할 수 있을만큼 효과적이고 든든한 육아정책의 존재는 저출생 문제 해결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부모 급여 신설’과 ‘단계적 유보통합 추진’ 등 육아정책과 관련된 몇 가지 국정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육아 정책에 있어 실질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전체 국정과제 중 육아 관련 과제가 몇 개 포함되었는지를 자랑하기보단, 그러한 국정과제를 진지한 의지를 갖추고 추진하여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그간 육아정책 분야에서 논의되어 왔던 여러 과제를 더욱 면밀하게 검토하고, 현장과 부모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2022년 육아정책연구소 제2차 육아정책 연구생태계 네트워크 포럼>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의 평안을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인 국회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CONTENTS

- 2022년 육아정책연구소 임신·출산 정책제안 공모전 결과 보고 1
/ 이재희 팀장(육아정책연구소 저출생·육아지원연구팀)

주제발표

- 새 정부 육아정책 국정과제에 대한 국민의견 11
/ 김나영 센터장(육아정책연구소 데이터연구센터)
- 부모급여 제도의 쟁점 및 정책과제 27
/ 박은정 부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미래교육연구팀)

종합토론

- 이병래 회 장(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45
- 장화정 본부장(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보호본부) 48
- 전효정 회 장(한국아동학회) 49
- 정정희 회 장(한국유아교육학회) 53

2022년 육아정책연구소 임신·출산 정책제안 공모전 결과 보고

이재희 팀장 | 육아정책연구소 저출생·육아지원연구팀



임신 출산 정책 제안 공모전 결과

이재희 팀장(육아정책연구소 저출생·육아지원연구팀)



목적 및 개요

- ❖ [저출생시대 육아인프라 및 추이분석 및 대응 방안 연구(1): 임신출산 인프라 중심으로] 연구의 일환으로 추진됨
- ❖ 정책 수요자를 대상으로 체감도 높은 임신 출산 정책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창의적인 신규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기획됨(작년도에 이어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진행하는 2번째 정책공모전)
- ❖ 공모일정: 2022년 7월 18일 ~ 8월 19일까지
- ❖ 홍보: 저출생시대 육아인프라 및 추이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조사 참여자, 육아정책연구소 협력기관, 유관학회 등을 통해 홍보함

심사 방법

❖ 총 19개의 제안서가 제출되었음

❖ 원내심사 후 14개 선정 -> 외부전문가 3명과 원내전문가 3명의 평균으로 최종 당선작 선정

❖ 평가내용

1. 사업명의 명확성(10)	① 사업명의 명확성(10)
2. 제안 배경의 시의적절성(20)	② 정책적 필요성(10)
	③ 제안 배경의 시의적절성 (10)
3. 지원 대상의 구체성(10)	④ 지원 대상의 구체성(10)
4. 지원 내용의 적절성 구체성(20)	⑤ 지원 내용의 적절성(10)
	⑥ 지원 내용의 구체성(10)
5. 사업의 차별성(10)	⑦ 기존 시행 사업과의 차별성(10)
6. 기대 효과의 구체성(10)	⑧ 기대 효과의 구체성(10)
7. 시행기관의 적절성(10)	⑨ 시행기관의 적절성(10)
	※ 추진절차, 수단, 체계 등 고려
8. 정책 제언의 실현가능성(10)	⑩ 정책 제언의 실현가능성(10)
	※ 법제도, 예산 및 자원, 외부환경적 측면 고려

심사 결과

순위	제안명	수상
1	수유실 및 유아 휴게실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최우수
2	웰컴키즈존(Welcome Kids Zone)	우수
3	출산 취약지역 인프라 구축 및 임신 출산 상담실 open	우수
4	산전 후 1개월 산모 대상 집중 지원 사업	장려
5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육아백과사전 알려주는 집(ZIP) "육아 알집 서비스"	장려
6	가임력 보존을 원하는 미혼여성 대상 사회적 난자 보관비용 지원	장려
7	모유 수유 지원 정책	장려
8	'양육은 산모의 실 권리와 건강회복 권리로부터~!!'	장려
9	모두모(姆)아(兒) (가칭) : 영유아 육아 사례 및 경험 데이터 플랫폼 구축	장려
10	예비 부모 교육	
11	외출하시나요? 아이를 잠시 맡기세요! & 육아는 이곳에 물어보세요!	
12	그 순간의 관심이 만들어 준 건강한 우리 가족	
13	임산부도 당당히 활인 받아!	
14	육아부모 직장 지원제도	

수상작(최우수상)

사업명	수유실 및 유아 휴게실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사업의 제안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유실 및 유아 휴게실에 대한 정보 부재로 인한 영. 유아를 양육 중인 부모들의 사회활동이 제한됨. - 영. 유아를 양육 중인 부모들은 수유실이나 유아 휴게실을 찾아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쇼핑을 하거나 집에서 인터넷 쇼핑을 이용할 수 밖에 없음. - 공공기관이나 여가시설, 식당 등에도 수유실이나 유아 휴게실이 설치된 곳을 찾기 어렵다 보니 사회활동이 제한됨. ○ 수유실 및 유아 휴게실을 설치하여도 정보의 부재로 인하여 활용도가 떨어짐. - 공연장, 문화 및 진화시설, 구기및지방자치단체 청사, 휴게소 등은 의무적으로 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홍보가 되지 않아 활용도가 떨어짐. - 최근 지역축제나 식당 등에도 유아휴게실이나 임산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나 홍보가 되지 않아 활용이 되지 않음. - 수유시설 검색을 위한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으나(https://sooyusil.com/) 공공기관이나 대형마트 등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인구보건복지협회에 자율적으로 등록하지 않은 시설은 검색되지 않거나 최신화가 되지 않아 폐쇄된 시설까지 검색됨.
사업의 지원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유실 및 유아 휴게실 설치 현황 및 구비 물품 정보 수집 - 현재 수유시설 검색을 할 경우 산발적으로 검색이 되거나 수유시설 검색 홈페이지를 이용하여도 아바이용 가능 여부 정도만 제공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 이용자가 수유시설 및 유아 휴게실 설치 여부와 냉, 난방시설, 세면대, 기저귀 갈이대 등 설치 여부 등을 등록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저비용으로 정보 수집이 가능함. ○ 부모 및 임산부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앱 또는 웹사이트 개발 - PC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검색이 가능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동 중 정보를 검색하는데 어려움이 많음. - 모바일 앱 또는 모바일 웹을 통해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임산부 등 즉시 홍보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함. - 기존의 사용자가 많은 네이버 지도, 카카오 맵, 구글 지도 등의 앱을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주기적인 업데이트 및 사후관리 - 사용자들이 직접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 주기적인 정보 업데이트 유도 - 사후 관리를 통해 양질의 앱 또는 웹사이트 운영



수상작(우수상1)

사업명	웰컴키즈존(Welcome Kids Zone)
사업의 제안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키즈존 증가 및 찬성 여론 확산 - 성인 손님에 대한 배려와 영유아 및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출입을 제한하는 노키즈존이 증가하고 있음. - 영업상 자유라는 견해와 영유아를 잠재적 위험 집단으로 설정하고 사전에 차단해 버린다는 점에서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견해가 대립하며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음. - 1인 기구 및 무지너 부부 등 영유아 양육과는 거리가 먼 가족구성 형태가 증가하면서 노키즈존 활성화에 찬성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음. ○ 출산 기피 및 비혼 확산 현상 우려 - 자유롭게 문화를 즐기는 무지너 부부 및 미혼남녀에게 출산 이후 자신도 출입 금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길 수 있음. 이로 인하여 저출산 및 비혼문화 확산 현상이 우려됨. ○ 영유아 자녀를 둔 가족의 외부활동(문화공간, 음식점, 카페 등) 제한 - 노키즈존 증가 및 활성화 찬성 여론 증가로 영유아 자녀를 둔 가족이 외부활동 전에 방문지에 전화하여 영유아가 출입이 가능한 곳인지 일일이 확인하거나, 노키즈존이 아니라 영유아 이용이 드문 공간에서는 가족이 눈치를 보며 이용하고 있음.
사업의 지원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플 또는 홈페이지 운영 - 웰컴키즈존을 확인할 수 있는 어플 및 홈페이지 운영 - 영유아 가족은 웰컴키즈존 사업장을 어플 및 홈페이지로 손쉽게 확인 가능 - 웰컴키즈존 사업장은 사업장의 홍보 가능 ○ 명패(간판) 제작 지원 - 입장 전 웰컴키즈존 공간을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웰컴키즈존 공간에 대한 이용 홍보를 도움 ○ 영유아가 이용하는 물품(의자 및 음료컵, 식판 등) 지원 ○ 영유아 가족을 위한 화장실 및 수유실 설치 시 기저귀 갈이대, 영유아 변기, 발판 등 일부 지원 ※ 지원 기준 : 사업장에서 웰컴키즈존 활성화 노력이 필요함 - 영유아를 위한 음식/음료 메뉴가 1개 이상 있을 것 - 홈페이지 또는 어플에 주기적으로 관련 내용 업데이트 등 영유아 안전을 위한 안내문 부착 및 관리



수상작(우수상2)

사업명	출산 취약지역 인프라 구축 및 임신 출산 상담실 open
사업의 제안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시대는 축소가족 형태이므로 젊은 층의 결혼 성 상담,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적극 적인 지원이 필요함 - 대상자들이 원할 때 즉시 궁금증이나 응급상황의 해결이 필요함 - 전문적인 지식과 출산의 경험을 가진 의료인이 대상자들의 need를 충족할 수 있음 ○ 출산 취약지역에 조산사의 인프라를 통한 인선하고 행복한 출산 교육과 분만이 필요함 - 대한조산협회 산하 각 지회의 인프라를 통해서 안전한 출산을 위한 교육과 분만을 시 행 - 지속적인 산후 및 영유아 관리를 시행할 수 있음 <p>이 사업을 제안하게 된 배경은 병원을 다니는 대상자라도 응급 시 친정 부모마음처럼 즉각적인 대응을 할 전문 인력 배치가 어려운 상황이다. 출산으로 인한 여성의 건강이 한가족, 사회 국가의 건강이 기본이 되어야 하는데 출산 취약지에서는 이런 전문적인 지지가 되고 있지 않음</p>
사업의 지원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상담 및 온라인 통한 상담 - 대한조산협회나 전국 각 지회 전화, 홈페이지, 각지부 조산원의 전화, 홈페이지를 활용한 온라인 상담이 가능 ○ 직접상담 - 대한조산협회나 서울조산협회, 각지회 사무실을 이용한 대상자의 need상담 ○ 전문적인 조산사의 인력활용한 교육과 출산지원(감염된 임신부 격리 출산 가능) - 가정 출산지원 - 방문을 통한 산후 및 모유, 영유아 관리 가능

수상작(장려상 1)

사업명	산전 후 1개월 산모 대상 집중 지원 사업
사업의 제안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전 후 1개월은 산모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환경의 변화가 가장 큰 시기로 집중 지원이 무엇보다 긴요한 기간임. - (초산) 출산 전 후 급격한 체력 소진과 함께 특히 영양적 집중 지원이 긴요함 - (둘째 이상 산모) 출산 후에도 다른 자녀 돌봄으로 인한 심리적, 체력적 부담이 커 다양한 사회적 집중 지원이 긴요함.
사업의 지원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 전후 1개월 임신부 및 산모 대상 반찬 배달 서비스 - 현재, 임신부 대상 농수산품 구매 바우처 지원사업이 운영 중으로 임신부들의 높은 호응도를 얻고 있음. - 이를 확장 지원하기 위해 출산 전후 가장 체력적 소모가 큰 시기인 출산 전후 1개월내에 임신부 및 산모를 대상으로 영양도가 높고, 체력 회복에 도움이 되는 완제품 반찬을 1주/2주/1개월 단위로 지원하는 것을 제안함. 직접적 배달 서비스와 함께 지역사회내에 시장 안 소상공인 반찬 가게 바우처 발급 등을 통해서, 정책 예산을 합리화 하고,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정책 구체화가 가능함. ○ 둘째 이상 출산 산모 대상, 다른 자녀 돌봄 지원사업 - 현재, 산모를 대상으로 돌보미 지원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중이며, 신생아 돌봄과 산모돌봄에 대한 높은 호응도를 얻고 있음 - 그러나, 둘째 이상 산모에게는 본인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돌봄의 부담도 크지만, 기출산 자녀를 위한 절대적인 돌봄시간, 심리적 변화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따라서, 신생아 돌봄 뿐 아니라, 기출산 자녀에 대한 1) 가정내 돌봄, 2)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하원 돌봄 서비스, 3) 놀이 돌봄 서비스 등을 지원할 것을 제안함.

수상작(장려상 2)

사업명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육아백과사전 알려주는 집(ZIP) "육아 알집 서비스"
사업의 제안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보 부모들은 육아 중 어떤 상황에서 아이에게 어떻게 대해야 옳은 방법인지 몰라 어려움 많음 ○ 아이들은 주로 밤이나 새벽시간에 여러 어려움을 울음이나 때를 쓰는 방식으로 표현하지만 초보 부모에게 그러한 시그널을 해석하기에는 경험이 부족하고 사례를 알 수 없어 육아에 어려움을 겪음 ○ 공동육아나눔터가 전국 350개 운영되고 있으나 사업 홍보가 덜 되어있고 사업의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음. 기존 돌봄공동체 데이터나 이용후기를 이용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 활용하여 기존에 육아관련 궁금증을 묻고 답한 내용을 빅데이터화 하여 볼 수 있게 하는 백과사전식 정보제공 또는 직접 1:1 육아상담을 바로 받을 수 있게 연계해주는 기능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함.
사업의 지원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육아 나눔터 어플리케이션 설치 후 본인인증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대화방과 알집 백과사전 사용가능 - 궁극적으로 게시판들 통해서 국가운영 육아 혜택이나 정보 습득 - 육아 관련 궁금증을 다른 부모와의 소통을 통해서 해결 ○ 육아 알집 백과사전을 만들어 초보 부모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검색하면 해당 답변을 찾을 수 있도록 시스템 구현 - 백과사전 답변란에 이용자들이 답변을 기재할 수 있게 하여 활용도를 높이고 모니터링도 가능하게 구현

수상작(장려상 3)

사업명	가임력 보존을 원하는 미혼여성 대상 사회적 난치 보편비용 지원
사업의 제안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 연령이 상승함에 따라 난임에 대한 보험으로 난치 보편을 고려하는 여성들이 증가하고 있음 - 발달차별원 난임센터가 출산 전 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난치보편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여성 10명 중 7명이 난치 보편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혼 여성 중 난치 보편 의사가 있는 비율은 69.8%(658명)로 높게 나타남 - 난치 보편에 대한 이유는 '당장 아이를 기질 생각이 없지만 난임, 노산 등에 대비해 57.4%(384명)와 '일단 건강한 난치를 보편해 놓고 싶어서 32.7%(224명)라는 향후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이유가 다수였음 - 실제 여성의 기질 능력은 나이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기관에서의 난치 동결 여성은 2014년 42명에서 2018년 635명으로 15배 이상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출처: 헬스조선 뉴스(2020.08.14), 늦은 결혼 新드렌드... 미혼여성 10명 중 7명 난치 보편 원해] ○ 이렇듯 미혼여성의 난치 보편에 대한 욕구는 높아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지원은 전무 하다고 볼 수 있음 - 난치 보편을 위한 시술 비용은 병원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25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나타남. - 그러나 해당 시술은 국민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해당하지 않아 시술받는 사람이 비용의 전액을 부담해야 함 - 기존 여성의 경우 정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통해 난치 동결 비용을 일부 지원받을 수 있으나, 미혼 여성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음 - 즉, 미혼 여성의 난치 동결을 위한 시술에는 어떠한 경제적 지원도 없는 상태임 [출처: 연합뉴스(2021.10.24), 난치 냉동하는 여성 늘었지만... 지원은 0] ○ 한국 보화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한국의 난임률은 13.2%이며 이는 미국 6.7%, 영국 8.6% 등과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준임. - 특히 난임 발생과 초산 연령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초산연령이 31.2세로 비교적 높은 한국의 실정을 고려하면 난임에 대한 선제적 예방조치가 필요함 - 미혼 여성의 난치 보편 시술은 난임 해결과 한 한국의 출생률 저하 상황에 도움이 될 것임 ○ 난임, 노산 등에 대비해 여성들의 난치 동결에 대한 욕구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가임력 보존을 원하는 미혼여성 대상 난치 동결 시술에 대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 제안하고자 함
사업의 지원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치 동결 시술 및 난치 보존 비용 지원 - 난치동결 시술의 경우, 시험관 이기 시술과 달리 국민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과대한 유대 주사비용도 모두 비급여임 - 미혼 여성의 난치 동결 시술 및 난치 보존비용을 국민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포함하거나 정부 또는 지자체 사업으로 지원 ○ 미혼 여성의 난치 동결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등 불필요한 절차 개선 - 미혼 여성의 경우 미혼 사실을 서류로 증명하는 절차를 강제하고 있어 자기결정권을 침해받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불필요한 절차를 개선하고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난치 보편에의 접근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음 [출처: 매일경제(2022.05.31), "난치 냉동하려면 미혼 사실 증명하세요"] ○ 미혼 여성의 난치 동결을 위한 휴가 제도 마련 등 정책적 지원 체계 마련 - 난치 채취 시 수술 전 준비 과정 및 마취 회복 시간 등 총 3~4시간 정도 소요 - 시술 이후에도 출혈과 통증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시술 당일 휴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휴가제도 마련 등 고려

수상작(장려상 4)

사업명	모유 수유 지원 정책
사업의 제안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유수유는 대다수의 산모들이 겪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임. - 산모들의 90%는 아기 건강을 위해 모유수유를 계획하지만, 60% 정도는 중도 포기해 이를 유지하는 경우가 적은 편임(15년 자료 기준). - 실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생후 2개월까지는 56.7%, 4개월까지는 50%, 12개월까지는 2%로 개월수가 경과함에 따라 모유수유율이 낮아짐(15년 자료 기준). - 특히, 한국의 경우 원전모유수유율은 18.3%로 국제평균수준인 38%의 절반 수준임. - 낮은 모유수유율의 원인 중 하나는 모유수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이는 모유수유에 대한 사전교육과 아이의 젓거부 등 수유 중 발생하는 돌발상황에 대한 대처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파악됨. ○ 이러한 모유수유의 어려움에도 모유수유 지원 정책이 부족함. - 실제로 산모들 대부분이 친정어머니와 같이 가까운 사람의 개인적 경험에 의존하여 모유 수유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음. - 이는 모유수유에 대한 사전교육기회가 부족하고 모유수유를 지속할 수 있는 지원 체계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됨. - 실제로 대다수의 산모가 모유수유 초기에 병원이나 조리원에서 모유수유에 대한 체계화된 지식을 전달받을 기회가 부족하고 모유 수유 중 겪는 신체적 어려움(가슴 통증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설 기관에 고가의 비용을 추가로 지불해야 함. ○ 따라서 체계적인 모유수유 지원 정책을 통해 연모비용을 높이고 산모들의 심신 건강을 제고하고자 함.
사업의 지원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부와 모유수유를 하고 있는 산모를 대상으로 모유수유 사전교육 및 상담기회 제공 - 임신부와 모유수유를 하고 있는 산모를 대상으로 온, 오프라인 사전교육 제공 - 출산 후 산모들이 머무르는 병원, 조리원 등에서 모유수유에 대한 체계적 교육 기회 제공 - 1회성이 아닌 1:1 상담원 지정 등을 통해 병원 및 조리원 퇴소 이후에도 모유수유에 대해 지속적으로 상담 받을 수 있도록 기회 제공 ○ 모유수유 중 신체적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산모들을 위한 각종 지원 제공 - 저렴한 비용으로 가슴 마사지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국, 공립 모유수유 지원센터설립을 통해 산모들이 모유수유 중 겪는 신체적, 심리적 어려움 해결에 도움 제공 - 센터설립이 어려울 시, 모유 수유 전문가의 주기적 가정 방문을 통해 산모들이 모유수유 중 겪는 신체적, 심리적 어려움 해결에 도움 제공 - 병원에서 최소 월 1회 이상 무료 가슴 진료 제공(별시 추가 진료 지원) 및 심리 상담 센터 등을 통해 모유수유로 겪는 심리적 어려움 해결에 도움 ○ 모유수유에 도움이 되는 물품 지원 확대 - 현재 모든 산모들에 일괄적으로 전달만 되어 가능한 유축기를 산모들의 수요 계획 및 현재 상태에 따라 3개월에서 최대 1년 단위로 확대 지원 - 모유수유 사전 교육 수료자에 한하여 모유수유에 필요한 물품(수유쿠션, 수유패드, 유두보호기 등)무상 제공

수상작(장려상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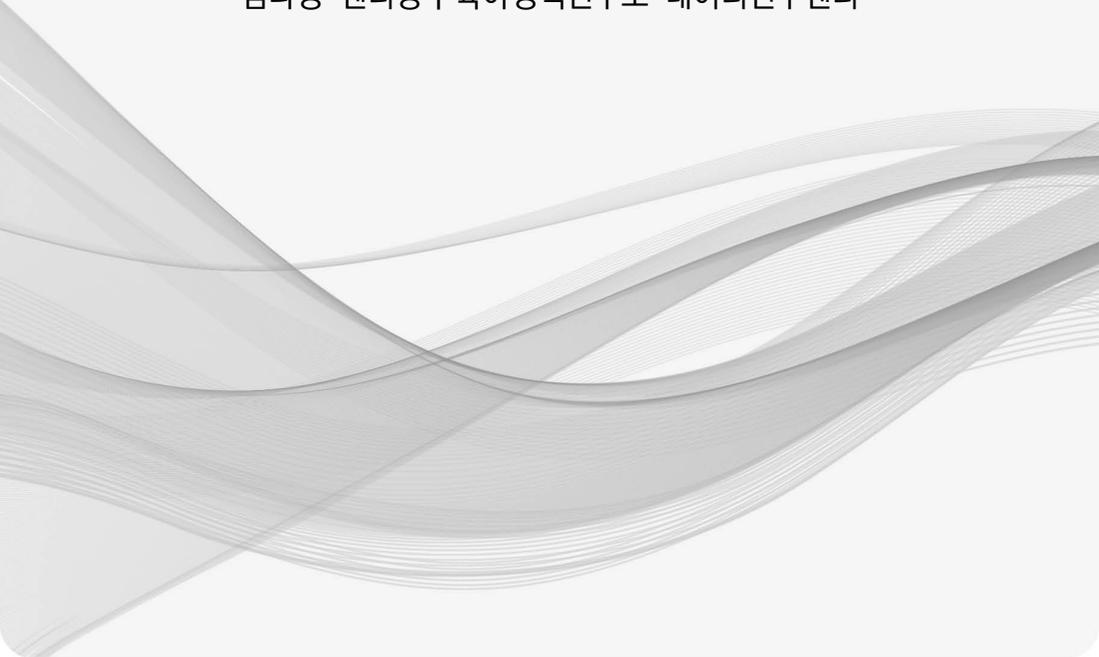
사업명	'양육은 산모의 삶 권리와 건강회복 권리로부터-'
사업의 제안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마다 출산장려금 등이 일회성으로 지원되고 있음. ⇨ 건강한 출산문화는 건강한 양육을 위한 기초 환경임. ⇨ 사회변화에 따라 부모 역할의 의미가 변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맞춰 '부모교육'이 절실한 상황임. 그러나 다양한 이유로 부모교육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따라서 ⇨ 부모교육 참여율을 높일 필요가 있는데 부모교육과 출산 지원을 연계함으로써 건강한 양육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음. ⇨ 출산 장려금 수령자들은 각 가정의 여건에 따라 지원금 사용 목적을 개인적 상황에 따라 사용하고 있음. ⇨ 신후조리원 이용 시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큼. 「참고:서성운(2017), 출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신후조리원 이용, 의료경영학연구 2017.11(1), p37-45.」 ⇨ 가정의 소득형편에 따라 산모의 심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음. (육아용품, 신후조리사 도우미 추가 인건비 지출 등) ⇨ 한 부모 산모의 경우 그 배경이 다양함. 특히 10대, 20대의 경우 정신적 혼란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 출산 후 '안전한 삶' 가질 수 없음. ⇨ 출산 후 신체적 회복을 위한 헬스케어(요가, 필라테스, 헬스 등) 지원을 통해 몸(신체) 건강 챙김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신후조리원-헬스케어-부모교육' 참여로 건강한 양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현실성 있는 제도가 필요함. ⇨ 처음 부모가 되는 경우 올바른 양육태도를 위한 교육이 필요함. 결과 건강 행김 바꾸쳐 제공을 조건으로 부모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다양한 이유로 부모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부모들을 참여할 수 있음.) ⇨ 지원금의 목적외 사용금지를 통해 산모가 출산 후 건강한 몸과 마음을 정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줌.
사업의 지원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 후 신후조리원 바꾸쳐 지급 - 신후조리원 이용(최소 1주일) 바꾸쳐를 제공함. 신후조리후 헬스케어 바꾸쳐 지급 - 산모 취향에 따라 헬스, 요가, 필라테스 등 이용권을 제공함. (바꾸쳐 지원금에 따라 일정 기간 운동할 수 있도록 함) - 최근 서울시에서는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을 늘리고 있음. 따라서 어린이집 시간제 보육을 이용(아기 돌봄)하면서 헬스케어 바꾸쳐를 사용할 수 있음. ○ 건강한 몸과 마음 챙김으로 건강한 양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음 - 정보통신과 사회변화에 따라 양육을 인터넷 검색과 각 지역의 맘카페에서 배우고 있음. 양육은 영아에 맞게 지원되어야 하는데 잘못된 인터넷 정보로 인해 영아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음. 따라서 공식적인 육아관련기관(육아정책연구소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보건소 등)에서 제공하는 부모교육에 3회 이상 참여해야 함. ○ 올바른 부모교육을 통해 부모가 힘을 알게

감사합니다

주제발표 1

새 정부 육아정책 국정과제에 대한 국민의견

김나영 센터장 | 육아정책연구소 데이터연구센터



새 정부 육아정책 국정과제에 대한 국민의견

김나영 센터장 | 육아정책연구소 데이터연구센터

2022년은 새 정부인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시기이기 때문에 정부의 국정과제 중에서 육아정책과 관련된 과제에 대하여 국민은 어떤 평가를 하였는가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새 정부의 육아 지원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우선적으로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1. 개괄

새 정부의 국정과제 중에서 육아정책 부문과 관련된 국정과제를 선별해 보면 다음 <표 IV-2-1>과 같다.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부모급여를 신설’, 아동의 건강권을 고려한, ‘장애 조기발견·개입을 위한 서비스체계를 구축하고 발달재활서비스 지원과 어린이 재활의료 인프라 확대’, 식생활 및 건강권 강화를 위한 ‘매일먹는 급식, 개인상태별 건강식까지 국가관리 확대’, 마지막으로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관계부처와 함께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운영하여 단계적으로 유보통합 추진’ 내용 등을 중심으로 육아정책 관련 국정과제를 제시하였다.

<표 IV-2-1>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중 육아정책 관련 국정과제

	과제목표	주요내용
1	다양한 공급주체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돌봄체계로 사회서비스를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우개선) 임금 가이드라인에 맞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적정화, 돌봄서비스 인력의 보수체계, 근로여건 개선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 향상
2	임신·출산 지원, 영유아~아동 양육, 보육 및 돌봄, 건강 관리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저출산 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급여 신설) 0~11개월 아동에 월 100만 원 부모급여 지급으로 가정 양육 지원 및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 • (보육서비스질제고) 아동당 교사비율과 시설면적 상향검토,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 보육환경 전반의 질적 향상, 부모교육·시간제보육 개선으로 양육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부처와 함께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운영, 0~5세 영유아 대상 보육과 유아교육의 단계적 통합 방안 마련 • (총체적 아동돌봄체계 마련) 마을돌봄(다함께돌봄센터·지역아동센터)을 활용해 주거지 인근 돌봄 수요 대응 및 학교돌봄 사각지대 보충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아이돌보미와 민간육아도우미 대상 교육 및 자격관리 제도 도입, 민간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도입 • (산모·아동 건강관리 체계화) ‘임신·출산 모바일앱’ 고도화 및 난임 부부 시술비·정신건강 지원 확대 추진, 임신·출산 진료비 보장성 확대 검토

	과제목표	주요내용
		- 전문인력이 가정에 직접 방문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전국 확대, 영유아~성인까지 검진기록을 연계하여 생애주기 통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3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와 학대 예방으로 아동의 공정한 출발 보장	• (아동·청소년 보호책임 강화) 보호아동 탈시설 로드맵 마련, 가정형 보호 확대를 추진하고, 관계기관 협업 활성화 등 통해 전방위 아동 학대 예방 시스템 구축
4	수요자 맞춤형 통합지원 강화를 통해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권리 증진	• (발달장애인) 장애 조기발견·개입을 위한 서비스체계를 구축하고 발달재활서비스 지원과 어린이 재활의료 인프라 확대
5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필요에 따른 가족서비스 지원 강화	• (한부모가족 지원) 한부모 증명서 발급기준 및 복지급여 지급대상 소득기준 단계적 상향 등을 통한 한부모 가족 지원 강화
		• (다문화가족 지원) 학령기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학교 적응 지원 및 인재 육성 등 다문화가족자녀 지원체계 강화 및 다문화 수용성 제고
		• (다양한 가족 지원) 청소년 부모, 1인가구 등 다양한 가족 지원 강화
6	취약계층을 위한 보편적 노동권 보호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육아휴직기간 및 육아휴직 급여 적용대상(특고 등), 배우자 출산휴가·난임휴가기간 확대 등 일·가정 양립 지원 - 성별근로공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양성평등 일자리 기반 조성
7	소외 계층을 포함한 전국민 대상 미디어 접근성 및 활용도를 제고하고, 디지털 플랫폼사업자·이용사업자·이용자 간 상생 생태계 구축	• (미디어 교육) (유아)찾아가는 놀이형 교육, (청소년)초중고 교육과정 연계 교육, (중·장년층·노안·장애인)특화교육 등 국민 생애주기별 격차없는 맞춤형 교육 제공
8	권력형 성범죄, 아동학대범죄, 흉악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근절하여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사회 실현	• (아동학대 방지 전방위 시스템 구축) 아동학대 원스톱 대응 시스템 구축
9	국민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ICT 혁신 기술 기반의 건강·의료서비스 확대	• (아동 진료체계) 맞춤형 교육·상담 등 (가칭)「아동 건강 길라잡이 (아동 주치의) 시범사업」도입,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서비스 등 강화
10	새로운 일상의 먹거리 안전망 확충과 건강위해요인 통합 관리로 안전사각지대 해소, 국가 식생활 관리체계 구축으로 모두가 건강한 삶을 향유	• (식생활 건강권) 매일먹는 급식, 개인상태별 건강식까지 국가관리 확대 - K-급식 위생영양관리체계 재설계, 맞춤형 메디푸드·건강기능식품 적정섭취 기반 확립 및 소비기한, 디지털점자 표시 등 선택권 보장
11	교통 및 건설·건축 현장의 안전 관리체계 확립과 치안 약자 등 사회적 약자 보호시스템 강화를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	• (교통안전)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체계(속도·신호 등) 개선, 고령자·어린이 보호 의무 확대, 이륜차·화물차 등 사고취약요인 관리 강화
		• (사회적 약자 보호) 여성·아동 대상 범죄 대응력 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12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게 교육과 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	• (유보통합) 관계부처와 함께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운영하여 단계적으로 유보통합 추진, 유치원 방과후 과정(돌봄) 대상과 운영시간(주말·저녁 등) 확대 -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 유치원-초등 교육과정 연계성 강화 등 추진

자료: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2022. 5).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2. 부모

윤석열 정부(2022~2026년)에서 국정과제로 제시한 육아정책의 3개 정책 범주(현금/의료비 지원, 유아교육·보육·돌봄 정책, 자녀돌봄/시간지원 정책)에 대해, 범주별로 향후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정책에 대한 중요도를 5점 척도로 평정하게 하였다.

1) 윤석열 정부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중요도

윤석열 정부(2022~2026년)에서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의 4개 항목에 대한 중요도를 질문하였다. 제시된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중 중요도가 높은 국정과제로, '의료비지원'과 '건강지원'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70% 내외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산모와 아동에 대한 건강관리 체계화' 65.9%, '부모급여의 도입' 60.1%로, 전반적으로 60%이상의 긍정응답률 가운데에서도 의료비지원과 건강지원의 증진에 대한 의견이 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2〉 윤석열 정부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중요도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잘 모르겠다	중요 비율 (4+5)	계(수)	5점 평균
	1	2	3	4	5				
1. (부모급여) 만0~1세 아동 현금지원 단계적 확대('23→'24년) : (만0세) 월70→100만 원, (만1세) 월35→50만원	7.6	5.6	22.5	21.1	39.0	4.1	60.1	100.0 (1,087)	3.8
2. 의료비 지원(영유아 의료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2.0	1.9	20.3	27.4	46.0	2.3	73.4	100.0 (1,087)	4.2
3. 건강 지원(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1.7	2.9	23.7	27.0	42.3	2.4	69.3	100.0 (1,087)	4.1
4. (산모·아동 건강관리 체계화) 임신출산 모바일앱 고도화, 난임부부 시술비·정신건강 지원 확대, 임신출산진료비 보장성 확대	2.9	4.4	23.5	28.7	37.2	3.4	65.9	100.0 (1,087)	4.0

주: 5점 평균은 '잘 모르겠다' 응답은 제외하고 산출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1~2022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2) 윤석열 정부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정책 중요도

유아교육·보육·돌봄 정책에 관한 12개 국정과제 중 중요도가 가장 큰 것은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로 중요하다는 응답이 전체 81.4%(4.4점/5점척도)로 나타났다. 여기에 교사대아동비율의 개선과 시설면적 상향, 부모교육과 시간제보육 개선으로 양육지원 강화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다음으로 사회적약자 보호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전방위 시스템의 구축과 식생활 건강권 보

장을 위한 지원내용 제안이 각 79.5%로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돌봄인력 보수체계의 개선(복지시
설종사자 보수 적정화 포함) 77.6%, 아이돌봄서비스 관련 아이돌보미/민간육아도우미 자격관리제
도 도입과 민간돌봄서비스 기관등록제 74.2%, 아동진료체계(맞춤형 교육상담 및 아동주치의제도
시범사업,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서비스 강화 등) 74.1%, 가정방문 건강관리사업/발달장애
인 재활서비스 지원 등 생애주기 통합적 건강관리체계 71.8%의 순으로 응답되었다.

제시된 모든 과제에 대해 중요하다는 긍정응답이 60% 이상으로 그 중요도가 큰 가운데, 미디어
교육 및 생애주기별 격차없는 맞춤형교육(65.4%)과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 및 유치 교육과정
연계 강화(65.9%)에 대한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응답률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3〉 분석역 정부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정책 중요도

구분	단위: %(명), 점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잘 모르겠다	중요 비율 (4+5)	계(수)	5점 평균
	1	2	2	3	3	4	4	5							
1. (미디어 교육) (유아)찾아가는 놀이형교육, (형소년) 초중고교육과정 연계 교육 등 국민 생애주기별 격차없는 맞춤형 교육	2.9	5.1	25.3	29.4	36.0	1.4	65.4	100.0	(1,087)	3.9					
2.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 유치원-초등 교육과정 연계성 강화 등 추진	2.0	4.8	25.8	33.2	32.6	1.7	65.8	100.0	(1,087)	3.9					
3. (사회적 약자 보호)아동학대 방지 전방위 시스템 구축) 여성·아동 대상 범죄 대응력 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아동학대 원소통 대응 시스템 구축	0.9	2.0	15.5	24.8	54.6	2.0	79.5	100.0	(1,087)	4.3					
4. (아동친로체계) 맞춤형 교육·상담 등 「아동 건강 길라잡이(아동주치의) 시범사업, 어린이 공공전 문진로센터 서비스 강화	1.5	2.7	19.7	30.3	43.9	2.0	74.1	100.0	(1,087)	4.1					
5. (식생활 건강권) 매일먹는 음식, 개인상태별 건강식까지 국가관리 확대/금식 위생영양관리체계 재 설계, 맞춤형 메디푸드·건강기능식품 적정섭취 기반, 소비기한/디지털점자표시 등 선택권 보장	0.7	2.2	15.2	26.7	52.8	2.4	79.5	100.0	(1,087)	4.3					
6. (사교육경감/학습격차완화/디지털 교육격차 해소) 학습시스템, 메타버스 활용 맞춤형 학습으로 사 교육 경감 추진 및 학습결손 해소 지원/생애주기별 디지털 역량 강화/저소득층SW·시영제교육, 다중문해력교육	1.7	3.7	21.4	30.1	40.5	2.7	70.6	100.0	(1,087)	4.1					
7. (돌봄인력 보수체계) 돌봄인력 보수체계, 근로여건 개선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 향상, 사회복지시 설중시자 보수 적정화	0.8	1.7	17.0	29.6	47.9	2.9	77.6	100.0	(1,087)	4.3					
8. (보육서비스 질 제고) 교사대어동비율,시설면적 상향검토, 부모교육과 시간제보육 개선으로 양육지 원 강화	0.6	1.3	13.6	27.2	54.2	3.0	81.4	100.0	(1,087)	4.4					
9. (유보통합)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 0~5세 영유아대상 유아교육과 보육의 단계적 통합 방안 마련	1.1	3.4	23.6	28.9	39.9	3.1	68.8	100.0	(1,087)	4.1					
10. (총합한 아동돌봄체계) 마을돌봄을 통한 주거지 인근 돌봄수요 대응, 학교돌봄 시각지대 보충/한 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청소년부모, 1인가구 등 다양한 가족의 필요에 따른 가족서비스 지원 강화	1.1	3.6	19.4	31.4	41.2	3.3	72.6	100.0	(1,087)	4.1					
11.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아이돌봄비/민간유아도우미 교육 및 자격관리제도 도입, 민간 돌봄서비스 기관등록제 도입	1.2	1.8	19.4	29.7	44.5	3.3	74.2	100.0	(1,087)	4.2					
12. (가정방문 건강관리사업/발달장애인) 전문인력이 가정에 직접 방문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전국 확대, 영유아~성인기까지 검진기록 연계로 생애주기 통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장애 조기 발견·개입을 위한 서비스체계 구축, 발달재활서비스 지원과 어린이 재활의료 인프라 확대	1.6	3.6	20.0	32.1	39.7	3.0	71.8	100.0	(1,087)	4.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1~2022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3) 윤석열 정부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중요도

윤석열 정부의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2개에 대한 중요도 평가는 육아휴직 급여와 기간 적용대상 확대 및 난임 휴가기간 확대 등 일가정양립 지원과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에 대한 중요도 응답이 80.9%로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유치원 방과후과정 돌봄 대상과 운영시간 확대에 대한 긍정응답이 77.4%로 높게 나타났다. 제시된 시간지원 과제에 대한 중요도 평가가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IV-2-4〉 윤석열 정부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중요도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잘 모르겠다	중요 비율 (4+5)	계(수)	5점 평균
	1	2	3	4	5				
1. 유치원 방과후 과정(돌봄) 대상과 운영 시간(주말·저녁 등) 확대	1.0	2.7	18.2	31.2	46.2	0.7	77.4	100.0 (1,087)	4.2
2.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육아휴직 기간/급여 적용대상(특고 등), 배우자 출산 휴가·난임휴가기간 확대 등 일가정 양립 지원	0.7	1.8	15.6	26.3	54.4	1.1	80.7	100.0 (1,087)	4.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1~2022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전반적으로 3개 범주에 대한 정책별 중요도 평가에서 부모는 현금/의료비 지원보다는, 교사대아동비율의 개선과 시설면적 상향, 부모교육과 시간제보육 개선의 양육지원 강화를 담고 있는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81.4%, 4.4점)와 ‘사회적약자 보호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전방위 시스템의 구축’, ‘식생활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내용’이 각 79.5%로 그 중요도가 부모에 의해 높게 평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와 기간/적용대상의 확대 및 난임 휴가기간 확대 등 일가정양립 지원과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과제에 대한 중요도 응답이 80.9%로 높았다.

4) 윤석열 정부에서 향후 가장 중요하거나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육아정책

각 3개 범주를 포괄하여 가장 중요하거나 우선적으로 집중해야할 과제를 1, 2순위로 응답하한 결과에서는, (1+2순위 중복응답 결과) ‘부모급여’의 중요도가 중복응답률 42.7%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의료비지원’에 대한 응답률 27.0%,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확대’(유치원 방과후과정 대상/운영시간 확대, 육아휴직 급여/기관 확대 등)에 대한 긍정응답이 중복 16.9%, 16.8%로 나타났다.

제시된 18개 과제 중, 부모들이 생각하는 중요도 평가는 유보통합의 추진(긍정응답 2.0%)과 가정방문 건강관리사업의 확대(2.9%)에서 가장 낮게 응답되었다.

〈표 IV-2-5〉 윤석열 정부에서 향후 가장 중요하거나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육아정책(1순위)

구분	1순위	2순위	1+2순위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1. (부모급여) 만0~1세 아동 현금지원 단계적 확대('23→'24년) : (만0세) 월 70→100만 원, (만1세) 월35→50만원	37.5	5.2	42.7
	2. 의료비 지원(영유아 의료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15.5	11.5	27.0
	3. 건강 지원(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4.0	2.9	6.9
	4. (산모·아동 건강관리 체계화) 임신출산 모바일앱 고도화, 난임부부 시술바·정신건강 지원 확대, 임신출산진료비 보장성 확대	2.5	3.0	5.5
유아교육·보육·초등 돌봄 정책	1. (미디어 교육) (유아)찾아가는 놀이형교육, (청소년) 초중고교육과정 연계 교육 등 국민 생애주기별 격차없는 맞춤형 교육	2.3	4.7	7.0
	2.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 유치원-초등 교육과정 연계성 강화 등 추진	1.7	2.5	4.2
	3. (사회적 약자 보호/아동학대 방지 전방위 시스템 구축) 여성·아동 대상 범죄 대응력 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아동학대 원스톱 대응 시스템 구축	4.4	4.3	8.7
	4. (아동진료체계) 맞춤형 교육·상담 등 「아동 건강 길라잡이(아동주치의) 시범사업」,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서비스 강화	1.0	3.4	4.4
	5. (식생활 건강권) 매일먹는 급식, 개인상태별 건강식까지 국가관리 확대/급식 위생영양관리체계 재설계, 맞춤형 메디푸드·건강기능식품 적정섭취 기반, 소비기한/디지털·점자표시 등 선택권 보장	4.8	6.4	11.2
	6. (사교육경감/학습격차완화/디지털 교육격차 해소) 학습시스템, 메타버스 활용 맞춤형 학습으로 사교육 경감 추진 및 학습결손 해소 지원/생애주기별 디지털 역량 강화/저소득층SW·시영재교육, 다중문해력교육	4.0	6.1	10.1
	7. (돌봄인력 보수체계) 돌봄인력 보수체계, 근로여건 개선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 향상,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보수 적정화	2.0	5.5	7.5
	8. (보육서비스 질 제고) 교사대아동비율,시설면적 상향검토, 부모교육과 시간제보육 개선으로 양육지원 강화	4.7	7.1	11.8
	9. (유보통합)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 0~5세 영유아대상 유아교육과 보육의 단계적 통합 방안 마련	0.6	1.5	2.0
	10. (총칭한 아동돌봄체계) 마을돌봄을 통한 주거지 인근 돌봄수요 대응, 학교 돌봄 사각지대 보충/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청소년부모, 1인가구 등 다양한 가족의 필요에 따른 가족서비스 지원 강화	1.6	3.6	5.2
	11.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아이돌보미/민간육아도우미 교육 및 자격관리제도 도입, 민간돌봄서비스 기관등록제 도입	1.6	7.5	9.0
	12. (가정방문 건강관리사업/발달장애인) 전문인력이 가정에 직접 방문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전국 확대, 영유아~성인기까지 검진기록 연계로 생애주기 통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장애 조기발견·개입을 위한 서비스체계 구축, 발달재활서비스 지원과 어린이 재활의료 인프라 확대	0.7	2.1	2.9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1. 유치원 방과후 과정(돌봄) 대상과 운영시간(주말·저녁 등) 확대	5.6	11.3	16.9
	2.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육아휴직 기간/급여 적용대상(특고 등), 배우자 출산휴가·난임휴가기간 확대 등 일가정 양립 지원	5.4	11.4	16.8

1순위 응답을 중심으로 중요도가 높은 과제별 하위특성변인을 살펴보면, ①‘부모급여’(1순위 중요도 응답 37.5%)의 경우 부, 자녀연령이 어릴수록(영아부모일수록), 외별이가구, 가구소득 250만원이하 저소득가구, 읍면지역에서 부모급여가 중요한 우선과제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②‘의료비지원’(15.5%) 응답은 부, 유아부모, 맞벌이가구와 맞벌이여부 비해당가구에서, ⑬‘유치원 방과후과정(돌봄) 대상/운영시간 확대’(5.6%)는 모, 유아부모, 맞벌이가구와 비해당가구,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읍면지역일수록, ⑭‘양성평등 일자리 구현’(5.4%)을 위한 육아휴직 급여/기간 확대 등의 의견은 모, 맞벌이가구, 가구소득 601만 원이상 고소득가구, 읍면지역일수록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은 경향을 보였다.

〈표 IV-2-6〉 분석역 정부에서 향후 가장 중요하거나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육아정책(1순위)(제특성별)

구분	① 부모 급여	② 의료비 지원	③ 건강 지원	④ 산모·아동 건강관리 체계화	⑤ 미디어 교육	⑥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 유치원-초등 교육과정 연계성 강화 등 추진	⑦ 사회적약자 보호/아동학대 방지 방법위 시스템 구축	⑧ 아동 진료 체계	⑨ 식생활 건강권	⑩ 사교육경감/학습지원 확대/디지털 교육격차 해소	⑪ 돌봄 인력 보수 체계	⑫ 보육서비스 제공	⑬ 유보 통합	⑭ 출생아동 체계	⑮ 아이돌봄 서비스	⑯ 가정방문 건강관리사업/발달장애인	⑰ 유치원 방과후 과정(돌봄대상과 운영시간·주말·저녁 등) 확대	⑱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계(수)
전체	37.5	15.5	4.0	2.5	2.3	1.7	4.4	1.0	4.8	4.0	2.0	4.7	0.6	1.6	1.6	0.7	5.6	5.4	100.0 (1,087)
성별																			
남성	48.2	18.2	5.2	1.6	2.3	2.0	3.3	0.3	4.2	2.3	1.3	1.6	0.3	0.3	1.0	0.0	3.9	3.9	100.0 (307)
여성	33.3	14.5	3.5	2.8	2.3	1.7	4.9	1.3	5.0	4.7	2.3	5.9	0.6	2.1	1.8	1.0	6.3	6.0	100.0 (780)
$\chi^2(df)$									47.284(17)***										
첫째아 기준																			
영아부모	58.2	14.4	4.3	3.4	1.0	2.4	3.4	0.0	1.4	0.0	1.0	1.9	0.5	0.5	1.4	0.5	1.9	3.8	100.0 (208)
유아부모	34.6	16.2	3.4	1.9	3.0	1.5	4.9	0.4	4.3	3.6	1.9	6.0	0.9	1.7	1.3	1.1	7.5	5.8	100.0 (468)
초등부모	30.4	15.3	4.4	2.7	2.2	1.7	4.4	2.2	7.1	6.6	2.7	4.6	0.2	1.9	1.9	0.5	5.4	5.8	100.0 (411)
$\chi^2(df)$									92.165(34)***										
맞벌이 여부																			
맞벌이	36.6	15.9	4.0	2.7	2.2	1.6	4.2	1.0	4.8	4.0	2.2	4.9	0.5	1.5	1.7	0.7	5.5	5.9	100.0 (983)
외벌이	54.1	9.8	6.6	0.0	3.3	3.3	4.9	1.6	4.9	4.9	0.0	1.6	0.0	0.0	0.0	0.0	3.3	1.6	100.0 (61)
해당없음	34.9	16.3	0.0	0.0	2.3	2.3	9.3	0.0	4.7	4.7	0.0	4.7	2.3	4.7	0.0	2.3	11.6	0.0	100.0 (43)
$\chi^2(df)$									37.802(34)										
소득 기준																			
250만원 이하	53.7	10.4	4.5	0.0	3.0	0.0	6.0	1.5	6.0	3.0	1.5	0.0	3.0	1.5	0.0	1.5	3.0	1.5	100.0 (67)
251~350만원	38.7	16.8	1.7	0.6	3.5	1.7	3.5	0.6	6.9	2.9	2.3	5.8	0.6	1.7	1.2	0.6	5.2	5.8	100.0 (173)
351~500만원	40.8	15.7	4.2	2.9	2.0	1.3	4.9	1.3	4.9	4.6	1.6	3.3	0.3	0.7	0.7	1.0	4.6	5.2	100.0 (306)
501~600만원	33.5	14.9	5.9	2.1	2.7	1.6	4.8	0.5	3.7	5.3	1.1	6.4	0.0	1.6	2.1	0.5	8.5	4.8	100.0 (188)
601만원 이상	33.1	16.1	3.7	3.7	1.7	2.5	4.0	1.1	4.0	3.7	2.8	5.4	0.6	2.3	2.5	0.6	5.7	6.5	100.0 (353)
$\chi^2(df)$									65.850(68)										
지역구분																			
대도시	37.9	14.4	4.3	1.9	2.9	2.2	4.8	1.2	5.3	3.1	1.4	6.0	0.7	1.7	2.4	0.5	4.6	4.8	100.0 (417)
중소도시	35.1	16.1	3.5	3.5	1.9	1.5	4.8	1.3	4.6	4.6	2.7	4.6	0.4	1.9	1.0	1.3	5.8	5.4	100.0 (479)
읍면	43.4	16.9	4.2	1.1	2.1	1.6	2.6	0.0	4.2	4.8	1.6	2.1	0.5	1.1	0.0	0.0	6.9	6.3	100.0 (189)
$\chi^2(df)$									31.972(3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1~2022 육아정책 성과평가 부모 조사」의 결과임.

*** $p < .001$.

3. 전문가

향후 중요도가 가장 높은 정책 범주로는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정책’이 67.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17.3%,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15.4% 순이었다.

〈표 IV-2-7〉 향후 가장 중요도가 높은 정책 범주

단위: %(명)

구분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유아교육·보육· 초등돌봄 정책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계(수)	
전체	15.4	67.3	17.3	100.0	(104)
분야					
유아교육	14.3	74.3	11.4	100.0	(35)
보육	20.9	60.5	18.6	100.0	(43)
기타	7.7	69.2	23.1	100.0	(26)
	$\chi^2(df)$	3.694(4)			
전공					
유아교육/교육	17.9	62.5	19.6	100.0	(56)
보육/가족/아동	13.8	75.9	10.3	100.0	(29)
사회복지/행정/경제/기타	10.5	68.4	21.1	100.0	(19)
	$\chi^2(df)$	2.216(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1~2022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정책’이 향후 중요도가 높은 이유는 영유아기에 정서적으로 안정된 환경의 필요성, 일·가정 병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 보육의 질 상승이나 노동계의 협력 및 유보통합 등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는 점,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 보편적으로 제공받는 육아 정책이라는 점 등이 제시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인데, 저출산이나 장기적인 가족기능약화 문제 예방, 부모가 직접 돌봄시 아동에게 심리·정서적 안정감을 줄 수 있다는 점, 감염발생시 필요성 등이 제시되었다.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과 관련해서는 코로나로 인해 생활비 지원이 필요해졌고, 저출산 극복에 기여할 수 있으며,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질 때 국민의 체감도가 높기 때문에 다른 돌봄 정책과 가족 지원의 근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의 세부 정책 중요도에 질문한 결과, 중요비율은 ‘의료비 지원(영유아 의료비 지원, 임·출산 진료비 지원)’ 81.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건강 지원(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80.8%, ‘(산모·아동 건강관리 체계화) 임신출산 모바일앱 고도화, 난임부부 시술비·정신건강 지원 확대, 임신출산진료비 보장성 확대’ 76.0%, ‘(부모급여) 만 0~1세 아동 현금지원 단계적 확대(‘23→’24년) : (만0세) 월70→100만 원, (만1세) 월35→50만원’ 58.7%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2-9〉 윤석열 정부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중요도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중요 하지 않다	보통					매우 중요 하다	중요 비율 (5+6+7)	계(수)	7점 평균
		1	2	3	4	5				
1. (부모급여) 만0~1세 아동 현금지원 단계적 확대('23→'24년) : (만0세) 월70→100만원, (만1세) 월35→50만원	3.8	9.6	10.6	17.3	24.0	19.2	15.4	58.7	100.0 (104)	4.7
2. 의료비 지원(영유아 의료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1.0	-	1.9	15.4	26.9	35.6	19.2	81.7	100.0 (104)	5.5
3. 건강 지원(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1.0	-	1.9	16.3	27.9	26.0	26.9	80.8	100.0 (104)	5.6
4. (산모·아동 건강관리 체계화) 임신출산 모바일앱 고도화, 난임부부 시술바정신건강 지원 확대, 임신출산진료비 보장성 확대	1.0	4.8	1.0	17.3	28.8	25.0	22.1	76.0	100.0 (104)	5.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1~2022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정책’의 세부 정책 중요도에 질문한 결과, 중요비율은 ‘(사회적 약자 보호/아동학대 방지 전방위 시스템 구축) 여성·아동 대상 범죄 대응력 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아동학대 원스톱 대응 시스템 구축’ 89.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아동진료체계) 맞춤형 교육·상담 등 「아동 건강 길라잡이(아동주치의) 시범사업」,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서비스 강화’ 78.8%,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 유치원-초등 교육과정 연계성 강화 등 추진’ 76.0%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2-10〉 윤석열 정부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정책 중요도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중요 하지 않다	보통					매우 중요 하다	중요 비율 (5+6+7)	계(수)	7점 평균
		1	2	3	4	5				
1. (미디어 교육) (유아)찾아기는 놀이형교육, (청소년) 초중고교육과정 연계 교육 등 국민 생애주기별 격차없는 맞춤형 교육	2.9	6.7	4.8	26.0	29.8	14.4	15.4	59.6	100.0 (104)	4.8
2.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 유치원-초등 교육과정 연계성 강화 등 추진	1.0	3.8	1.9	17.3	25.0	27.9	23.1	76.0	100.0 (104)	5.4
3. (사회적 약자 보호/아동학대 방지 전방위 시스템 구축) 여성·아동 대상 범죄 대응력 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아동학대 원스톱 대응 시스템 구축	1.9	-	1.0	7.7	16.3	31.7	41.3	89.4	100.0 (104)	6.0

구분	전혀 중요 하지 않다	보통					매우 중요 하다	중요 비율 (5+6 +7)	계(수)	7점 평균
	1	2	3	4	5	6	7			
4. (아동진료체계) 맞춤형 교육·상담 등 「아동 건강 길라잡이(아동주치의) 시범사업」,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서비스 강화	-	1.9	5.8	13.5	31.7	32.7	14.4	78.8	100.0 (104)	5.3
5. (식생활 건강권) 매일먹는 급식, 개인상 태별 건강식까지 국가관리 확대/급식 위생영양관리체계 재설계, 맞춤형 메디푸드·건강기능식품 적정섭취 기반, 소비기한/디지털·점자표시 등 선택권 보장	1.0	2.9	5.8	15.4	23.1	36.5	14.4	74.0	100.0 (104)	5.3
6. (사교육경감/학습격차완화/디지털 교육격차 해소) 학습시스템, 메타버스 활용 맞춤형 학습으로 사교육 경감 추진 및 학습결손 해소 지원/생애주기별 디지털 역량 강화/저소득층SW·AI영재교육, 다중문화력 교육	1.0	3.8	4.8	13.5	22.1	35.6	18.3	76.0	100.0 (104)	5.3
7. (돌봄인력 보수체계) 돌봄인력 보수체계, 근로여건 개선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 향상,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보수 적정화	-	-	5.8	8.7	21.2	31.7	32.7	85.6	100.0 (104)	5.8
8. (보육서비스 질 제고) 교사대아동비율, 시설면적 상향검토, 부모교육과 시간제보육 개선으로 양육지원 강화	-	1.0	2.9	4.8	10.6	23.1	56.7	90.4	100.0 (104)	6.2
9. (유보통합)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 0~5세 영유아대상 유아교육과 보육의 단계적 통합 방안 마련	2.9	1.9	2.9	12.5	6.7	15.4	55.8	77.9	100.0 (104)	5.9
10. (촘촘한 아동돌봄체계) 마을돌봄을 통한 주거지 인근 돌봄수요 대응, 학교돌봄 사각지대 보충/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청소년부모, 1인가구 등 다양한 가족의 필요에 따른 가족서비스 지원 강화	-	1.0	3.8	7.7	18.3	34.6	34.6	87.5	100.0 (104)	5.9
11.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아이돌보미/민간육아도우미 교육 및 자격관리제도 도입, 민간돌봄서비스 기관등록제 도입	1.9	1.9	6.7	12.5	25.0	28.8	22.1	76.0	100.0 (104)	5.3
12. (가정방문 건강관리사업/발달장애인) 전문인력이 가정에 직접 방문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전국 확대, 영유아~성인기까지 검진기록 연계로 생애주기 통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장애 조기발견·개입을 위한 서비스체계 구축, 발달재활서비스 지원과 어린이 재활의료 인프라 확대	-	1.9	4.8	14.4	18.3	33.7	26.0	77.9	100.0 (104)	5.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1~2022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의 세부 정책 중요도에 질문한 결과, 중요비율은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육아휴직 기간/급여 적용대상(특고 등), 배우자 출산휴가·난임휴가기간 확대 등 일가정 양립 지원 89.4%, ‘유치원 방과후 과정(돌봄) 대상과 운영시간(주말·저녁 등) 확대’ 68.3%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2-11〉 윤석열 정부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중요도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중요하지 않다		보통					매우 중요하다	중요 비율 (5+6+7)	계(수)	7점 평균
	1	2	3	4	5	6	7				
1. 유치원 방과후 과정(돌봄) 대상과 운영시간(주말·저녁 등) 확대	3.8	3.8	5.8	18.3	26.9	28.8	12.5	68.3	100.0 (104)	5.0	
2.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육아휴직 기간/급여 적용대상(특고 등), 배우자 출산휴가·난임휴가기간 확대 등 일가정 양립 지원	-	1.9	1.0	7.7	20.2	36.5	32.7	89.4	100.0 (104)	5.9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1~2022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4. 향후 정책방향

향후 가장 중요하거나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육아정책을 지정하도록 한 조사 결과는 1순위를 기준으로 할 때, ‘(유보통합)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 0~5세 영유아대상 유아교육과 보육의 단계적 통합 방안 마련’이 27.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부모급여) 만0~1세 아동 현금지원 단계적 확대(‘23→’24년) : (만0세) 월70→100만 원, (만1세) 월35→50만원’과 ‘(보육서비스 질 제고) 교사대아동비율, 시설면적 상향검토, 부모교육과 시간제보육 개선으로 양육지원 강화’ 항목이 각각 18.3%로 그 뒤를 이었다.

〈표 IV-2-12〉 윤석열 정부에서 향후 가장 중요하거나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육아정책(1순위, 2순위, 1+2순위)

구분	1순위	2순위	1+2순위	
〈현금 및 의료비 지원 정책〉	1. (부모급여) 만0~1세 아동 현금지원 단계적 확대(‘23→’24년) : (만0세) 월 70→100만 원, (만1세) 월35→50만원	18.3	4.8	23.1
	2. 의료비 지원(영유아 의료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2.9	4.8	7.7
	3. 건강 지원(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1.0	1.9	2.9
	4. (산모아동 건강관리 체계화) 임신출산 모바일앱 고도화, 난임부부 시술바정 신건강 지원 확대, 임신출산진료비 보장성 확대	1.0	-	1.0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정책〉	1. (미디어 교육) (유아)찾아가는 놀이형교육, (청소년) 초중고교육과정 연계 교육 등 국민 생애주기별 격차없는 맞춤형 교육	-	1.0	1.0
	2.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 유치원-초등 교육과정 연계성 강화 등 추진	7.7	6.7	14.4
	3. (사회적약자 보호/아동학대 방지 전방위 시스템 구축) 여성·아동 대상 범죄 대응력 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아동학대 원스톱 대응 시스템 구축	3.8	4.8	8.7
	4. (아동진료체계) 맞춤형 교육·상담 등 「아동 건강 길라잡이(아동주치의) 시범사업」,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서비스 강화	1.0	1.9	2.9
	5. (식생활 건강권) 매일먹는 급식, 개인상태별 건강식까지 국가관리 확대/급식 위생영양관리체계 재설계, 맞춤형 메디푸드·건강기능식품 적정섭취 기반, 소비기한/디지털·전자표시 등 선택권 보장	1.0	1.9	2.9

구분	1순위	2순위	1+2순위
6. (사교육경감/학습격차완화/디지털 교육격차 해소) 학습시스템, 메타버스 활용 맞춤형 학습으로 사교육 경감 추진 및 학습결손 해소 지원/생애주기별 디지털 역량 강화/저소득층SW·SI영재교육, 다중문해력교육	2.9	6.7	9.6
7. (돌봄인력 보수체계) 돌봄인력 보수체계, 근로여건 개선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 향상,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보수 적정화	2.9	7.7	10.6
8. (보육서비스 질 제고) 교사대아동비율,시설면적 상향검토, 부모교육과 시간제보육 개선으로 양육지원 강화	18.3	20.2	38.5
9. (유보통합)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 0~5세 영유아대상 유아교육과 보육의 단계적 통합 방안 마련	27.9	16.3	44.2
10. (촘촘한 아동돌봄체계) 마을돌봄을 통한 주거지 인근 돌봄수요 대응, 학교 돌봄 사각지대 보충/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청소년부모, 1인가구 등 다양한 가족의 필요에 따른 가족서비스 지원 강화	5.8	6.7	12.5
11.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아이돌봄미/민간육아도우미 교육 및 자격관리제도 도입, 민간돌봄서비스 기관등록제 도입	1.0	4.8	5.8
12. (가정방문 건강관리사업/발달장애인) 전문인력이 가정에 직접 방문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전국 확대, 영유아~성인기까지 검진기록 연계로 생애주기 통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장애 조기발견·개입을 위한 서비스체계 구축, 발달재활서비스 지원과 어린이 재활의료 인프라 확대	1.9	2.9	4.8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1. 유치원 방과후 과정(돌봄) 대상과 운영시간(주말·저녁 등) 확대	-	2.9	2.9
2.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육아휴직 기간/급여 적용대상(특고 등), 배우자 출산휴가·난임휴가기간 확대 등 일가정 양립 지원	2.9	3.8	6.7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21~2022 육아정책 성과평가 전문가 조사」의 결과임.

향후 가장 중요하거나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육아정책으로 지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유보통합)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 0~5세 영유아대상 유아교육과 보육의 단계적 통합 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30여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보육과 유치원 이원체제 극복 요구, 교사의 수준 향상 필요성, 영유아의 공정하면서도 양질의 보육과 교육을 받을 권리 보장, 이원화된 체계에서 정책의 효율성이 낮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부모급여) 만0~1세 아동 현금지원 단계적 확대(‘23→’24년) : (만0세) 월70→100만 원, (만1세) 월35→50만원’에 대해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체감도 높은 정책일 뿐 아니라, 경제적 지원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이고 현실적이라는 점이 제시되었다.

‘(보육서비스 질 제고) 교사대아동비율, 시설면적 상향검토, 부모교육과 시간제보육 개선으로 양육지원 강화’의 이유로는 높은 교사대아동비율과 물리적 환경 등의 문제로 질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보육교사의 질 제고와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 가정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교육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주제발표 2

부모급여 제도의 쟁점 및 정책과제

박은정 부연구위원 | 육아정책연구소 미래교육연구팀



2022년 제2차 KICCE 육아정책 연구생태계 네트워크 포럼

부모급여 제도의 쟁점 및 정책과제

발표일 | 2022.12. 9

발표자 | 박은정 부연구위원 (육아정책연구소)



2022년

제2차 KICCE 육아정책 연구생태계 네트워크 포럼

CONTENTS

- 01 들어가며
- 02 부모급여 도입 필요성 및 효과성 검토
- 03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
- 04 부모급여 도입 시 쟁점 및 과제





들어가며

✓ 2022년 육아정책연구소 수시과제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통합적 제도 구축 연구” 수행

연구목적

- 육아정책에서 부모급여의 제도적 성격을 규명하고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를 면밀히 검토
- 연구결과 도출된 부모급여의 제도적 쟁점에 대한 통합적 정책방안 제시
 - 제도적 상보성을 고려하여 통합적인 관점에서 쟁점 및 대안 도출

주요 연구 내용

- 영아가구 대상 소득 및 비용 지원제도 분석
- 해외사례 분석: 스웨덴, 노르웨이, 독일, 프랑스의 수당제도, 육아휴직급여, 보육료 지원 제도 분석
- 부모급여의 영아가구 양육비 및 가구소득 보전 효과 분석: 부모급여 도입 시 소득분위별 소득 및 양육비 대비 부모급여 비율 산출, 소득분위별 육아휴직급여의 실질소득대체율 변화 분석
- 전문가 의견 조사
- 부모급여의 쟁점 및 대응방안 도출

본 발표에서는... → ✓ 해당 수시과제 중 일부를 발췌하여 발제

들어가며

부모급여 제도개요

- 부모급여의 도입 목적: 영아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비 부담 완화와 소득보장 강화(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2. 8. 19)
- 지급대상 및 지급액: 2024년부터 만0세 월 100만원, 만1세 월 50만원 지급
(* 2023년은 한시적으로 만0세 월70만원, 만1세 월 35만원 지급)
- 지급형태: 2023년 지급형태만 결정
 - 가정양육 시: 현금 지급
 - 어린이집 이용 시: 만 0세 - 보육료 바우처 +현금 지급
만 1세 - 보육료 바우처 지급

부모급여 도입 이후 현금지원 체계

[그림 1] 부모급여 도입 시 현금지원 제도 변화

단위: 만원

		2022년				2023년				2024년 이후			
		연령	0세	1세	2-7세	연령	0세	1세	2-7세	연령	0세	1세	2-7세
이동수당		월 10				월 10				월 10			
보육	가정양육	현금	월 70	월 35	월 10	현금	월 100	월 50	월 10	현금	월 100	월 50	월 10
	어린이집 이용	보육료 바우처 + 현금	월 70	월 35	월 10	보육료 바우처 + 현금	월 100	월 50	월 10	보육료 바우처 + 현금	월 100	월 50	월 10

자료: 보건복지부(2022), 2022년 영아수당 사업안내. p4를 일부 참조하여 수정. 보완 후 작성

02

부모급여 도입 필요성 및 효과성 검토

1. 영아가구의 양육비 및 소득 분석
2. 부모급여의 양육비 및 소득보전 효과 분석
3. 부모급여의 육아휴직급여 실질소득대체율 보전 효과 분석

1. 영아가구의 양육비 및 소득분석

영아가구의 자녀양육 양상 및 욕구

- 0세아의 높은 가정양육 비중
 - 0세반 어린이집 이용률 20.4%, 1세반은 79.3%로 급증, 2세는 88.4%로 유아의 기관보육률과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
-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에 따르면, 최초 기관 이용 월령은 평균 21.8개월(표 1 참조)
- 영아 부모 중 다수가 기관보육보다 가정양육 선호 (유해미, 박은정, 홍희정, 신윤정, 송신영, 2021)
 - 자녀를 기관보육 중인 0, 1세 부모 중 0세아 부모의 76.9%, 1세아 부모는 53.5%가 기관보육을 너무 이른 시기에 시작했다고 응답
 - 직장에 복귀하거나 학업 등을 이유로 자녀를 일찍 어린이집에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응답이 71.1%로 가장 높았음.

<표 1> 최초 기관 이용 월령

단위: %(명)

구분	12개월 미만	12-23개월	24-35개월	36-47개월	48-59개월	60개월 이상	계(수)	평균	표준 편차
전체	132	463	246	124	31	04	1000 (2640)	21.8 개월	10.8

자료: 김은설 외(202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p.182에서 일부 발췌.

- 24개월 미만 자녀를 둔 부모에게 적합한 비용지원 방식 선호 조사
 -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현금지원'이 적합한 응답이 가장 높은 선호도
 - 0세아의 경우는 1순위에서 49.6%, 합산순위로는 61.5%
 - 1세아의 경우는 1순위에서 45.3%, 합산순위에서 56.9%

1. 영아가구의 양육비 및 소득분석

영아가구의 낮은 가구소득

- 영아가구가 소득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이유는 임신, 출산, 자녀양육으로 인한 비용 지출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도 주요 요인
- 우리나라 여성의 연령대별 고용률을 살펴보면, 주로 임신과 출산이 이루어지는 30대에서 고용률이 감소하다가 40대 이후에 다시 고용률이 증가하는 M자 곡선
- 자녀가 영유아기일 때 어머니들 중 상당수가 경력단절을 경험하며, 만 18세 미만 자녀가 없는 기혼여성의 경력단절 비율에 비해 5배 이상 높게 나타남(표 2 참조)

<표 2> 미성년 자녀여부 및 자녀연령별 경력단절여성(2020년)

단위: 천 명, %

	기혼여성 (A)	비취업 여성(B)	비율 (B/A)	경력단절 여성(C)		
				비율 (C/A)	비율 (C/B)	
전체	8,578	3,420	39.9	1,506	17.6	44.0
18세 미만 자녀없음	3,768	1,282	34.0	264	7.0	20.6
18세 미만 자녀있음	4,810	2,139	44.5	1,242	25.8	58.1
-6세 이하	2,081	1,036	52.5	765	37.7	71.8
-7~12세	1,587	659	41.5	336	21.1	50.9
-13~17세	1,192	414	34.7	142	11.9	34.2

주: 1) 자녀 연령은 막내자녀 기준임

2) 15~54세 기혼여성임.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1. 9. 6), 2021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p.44.

1. 영아가구의 양육비 및 소득분석

영아가구의 낮은 가구소득

- 「KICCE 소비실태조사」에서 영유아가구의 가구소득을 하위 30%, 중위 40%, 상위 30%로 구분한 결과를 살펴보면, 자녀 연령이 낮을수록 가구소득이 하위 30% 구간에 속한 가구가 증가 추이 보임(표 3 참조)
- 영아가구의 양육 어려움 조사 결과, 자녀의 양육비용 부담을 1 순위로 응답하였으며, 적합한 비용 지원 방식으로 가정 양육 시 현금지원을 가장 선호(유해미 외, 2021: 158~161)

<표 3> 특성별 가구소득분위 분포 비율

단위: 가구(%)

구분		하위 30%	중위 40%	상위 30%	전체
전체		1,005(30.1)	1,340(40.1)	999(29.9)	3,344(100.0)
맞벌이 가구	맞벌이	212(14.4)	531(36.0)	730(49.6)	1,473(100.0)
	여부	793(42.4)	809(43.2)	263(14.4)	1,871(100.0)
초등이상		272(23.2)	503(43.0)	395(33.8)	1,170(100.0)
채유유무		733(33.7)	837(38.5)	604(27.8)	2,174(100.0)
자녀연령	0세	1,334(24.4)	1,284(40.8)	531(16.9)	3,149(100.0)
	1세	2,424(40.0)	237(39.2)	1,262(20.8)	6,055(100.0)
	2세	1,703(31.5)	207(38.4)	1,623(30.1)	5,533(100.0)
	3세	1,202(25.9)	1,884(40.6)	1,553(33.5)	4,639(100.0)
	4세	1,192(25.4)	1,974(42.1)	1,523(32.5)	4,689(100.0)
	5세	1,122(23.6)	1,994(42.0)	1,633(34.4)	4,749(100.0)
6세		1,092(22.7)	1,843(38.3)	1,883(39.1)	4,818(100.0)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차년도(2019년-3차년도(2020년) 원자료, 최효미, 이정원, 김자연, 이재희, 김태우(2021),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IV), pp.263~264를 재구성 및 재계산하여 작성함.

2. 부모급여의 양육비 및 소득보전 효과 분석

부모급여의 소득증가 및 양육비 보전 분석

- 육아정책연구소가 2021년 수행한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를 활용하여 양육비 및 가구소득 보전 효과를 분석
 - 양육비와 부모급여가 동일할 경우 1의 값이며, 1 이상인 경우 부모급여가 양육비 이상임을 의미
- 부모급여 지급 시 월평균 가구소득액의 증가비율과 양육비 대비 부모급여의 비중을 산출
- 영아가 1명인 경우, 2024년에 부모급여 지급으로 인한 0세아가구의 가구소득 증가율은 23%이며, 1세아가구의 가구소득 증가율은 11.2%
- 2024년 0세아가 1명인 가구의 양육비 대비 부모급여액 비율은 1.35로 부모급여가 양육비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세의 경우는 0.65

<표 4> 영아수 및 연령별 부모급여의 소득증가 및 양육비 보전 비율

단위: 가구, 만원, %

구분	전체	1명		2명		
		0세	1세	0,1세	0세	1세
가구수	510	210	244	21	13	21
월평균 가구소득액(A)	4420	4357	4484	4457	4923	4051
월평균 양육비(지출액)(B)	794	739	770	1067	1454	924
23년 부모급여(C)	565	700	350	1050	1400	700
24년 부모급여(D)	808	1000	500	1500	2000	1000
가구소득+23년 부모급여(E)	4985	5057	4834	5507	6323	4751
가구소득+24년 부모급여(F)	5227	5357	4984	5957	6923	5051
23년 부모급여 가구소득증가(E-A/A*100)	128	16.1	7.8	23.6	28.4	17.3
24년 부모급여 가구소득증가(F-A/A*100)	183	23.0	11.2	33.7	40.6	24.7
양육비 대비 23년 부모급여(C/B)	0.71	0.95	0.45	0.98	0.96	0.76
양육비 대비 24년 부모급여(D/B)	1.02	1.35	0.65	1.41	1.38	1.08

2. 부모급여의 양육비 및 소득보전 효과 분석

부모급여의 소득증가 및 양육비 보전 분석

- 0, 1세 영아가구의 가구 소득분위별로 부모급여 지급 시 효과 분석
- 저소득층에서 부모급여로 인한 소득 보전 효과의 체감도가 클 것으로 예측
 - 2024년 기준 부모급여가 양육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분위 ~3분위는 1을 상회하여 부모급여가 양육비를 초과하며, 4분위와 5분위 고소득 가구는 1 미만 2024년 0세아가 1명인 가구의 양육비 대비 부모급여액 비율은 1.35로 부모급여가 양육비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세의 경우는 0.65

<표 5> 영아가구의 가구소득분위별 부모급여의 소득증가 및 양육비 보전 비율

단위: 가구, 만원, %

구분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가구수	510	89	124	94	102	101
월평균 가구소득액(A)	4420	2246	3205	3947	4956	7724
월평균 양육비지출액(B)	794	617	664	841	917	939
23년 부모급여(C)	565	566	570	599	539	554
24년 부모급여(D)	808	809	815	856	770	792
가구소득+23년 부모급여(E)	4985	2812	3776	4547	5495	8278
가구소득+24년 부모급여(F)	5227	3054	4020	4804	5726	8516
23년 부모급여 가구소득증가((E-A)/A*100)	128	252	178	152	109	72
24년 부모급여 가구소득증가((F-A)/A*100)	183	360	254	217	155	103
양육비 대비 23년 부모급여(C/B)	0.71	0.92	0.86	0.71	0.59	0.59
양육비 대비 24년 부모급여(D/B)	1.02	1.31	1.23	1.02	0.84	0.84

3. 부모급여의 육아휴직급여 실질소득대체율 보전 효과 분석

부모급여 지급 시 소득분위별 육아휴직급여의 실질소득대체율 분석

- 가계동향조사에서 소득분위별 월평균 근로소득을 추출하고, 육아휴직급여의 상·하한액과 소득대체율을 적용하여 소득분위별 육아휴직급여액을 산출하고, 육아휴직급여액의 근로소득 대비 실질소득대체율을 산출
- 육아휴직급여가 제시하는 소득대체율 80%는 소득 2분위에서 나타나며, 소득 3분위의 육아휴직급여의 실질소득대체율은 56.4%, 4분위는 40.5%, 5분위는 24.5%
- **부모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경우**
 - 0세는 2분위까지는 100% 이상의 실질소득대체율, 3분위에서도 실질소득대체율이 93.9%로 나타나 육아휴직급여 제도가 목표하는 80% 이상의 소득대체율 도달
 - 1세에 육아휴직급여와 부모급여를 받을 경우에 3분위에서 약 75.2%

<표 6> 부모급여 도입 시 소득분위별 육아휴직급여 실질소득대체율 변화

분위	인근수준(A)	육아휴직급여	부모급여	육아휴직급여+부모급여(B)	실질소득대체율(B)/A*100
0세 1명					
1분위	312	700	1,000	1700	544.9
2분위	1,635	1,308	1,000	2308	141.2
3분위	2,661	1,500	1,000	2500	93.9
4분위	3,702	1,500	1,000	2500	67.5
5분위	6,121	1,500	1,000	2500	40.8
전체	2,887	1,500	1,000	2500	86.6
1세 1명					
1분위	312	700	500	1200	384.6
2분위	1,635	1,308	500	1808	110.6
3분위	2,661	1,500	500	2000	75.2
4분위	3,702	1,500	500	2000	54.0
5분위	6,121	1,500	500	2000	32.7
전체	2,887	1,500	500	2000	69.3

03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

1. 조사개요
2. 부모급여 제도 설계에 대한 의견
3. 부모급여의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4. 유관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

1. 조사개요

조사목적

- 정책 전문가들이 바라본 부모급여의 제도적 쟁점과 보완점을 파악하고,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부모급여의 파급효과와 수반되어야 할 유관 제도의 확충 및 개선사항 도출

조사대상 및 방법

- 조사대상: 다양한 분야에서 수당, 육아휴직, 보육서비스 등에 대한 연구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 아동학, 가족학, 사회복지학, 사회학, 경제학, 행정학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총 29명 응답
- 조사방법: 이메일 조사로 실시하였으며, 구조화된 질문과 반구조화 개방형 질문 혼합형 질문지로 진행

주요 조사 내용

- 영아가구 지원 정책 관련 인식, 부모급여의 제도적 설계에 대한 의견, 부모급여의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유관 제도 확충 및 개선 의견 등

2. 부모급여 제도 설계에 대한 의견

부모급여의 적절한 지급형태

- '일괄 현금 지급'(48.3%)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보육 서비스 바우처+현금지급'과 '사용처 제한 바우처 지급'을 각각 17.2%가 응답
 - 현금 지급 선택 이유: 자녀 돌봄 방식 선택 등 '부모의 선택권' 보장, 소득보장 강화, 양육비 부담 완화 등 부모급여 제도 도입 목적에 부합, 행정비용을 최소화하고 수급자의 효용을 극대화(효율성 측면)
 - 보육서비스 바우처와 현금을 혼합하여 지급하는 형태 선택 이유: 불가피한 어린이집 이용 실수요자에게 적합, 현금으로 소득만 지원하는 것보다 서비스 인프라의 확충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에 중점을 둘 필요

부모급여의 적절한 지급형태

- '아동 단위' 지급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58.6%, 가구 단위 지급이 적절하다는 의견은 24.1%, 기타 의견 17.2%
 - 아동단위 선택 이유: 기존의 가정양육수당이나 영아수당 등과 동일하게 '아동 단위'로 지급함이 적절, 부모급여는 아동 양육을 조건으로 하는 아동양육 관련 급여, 행정의 수월성, 현금지원은 개별 인구 단위 지급이 타당, 아동의 개인 복지 증진 목적, 출산정책과 맞물려 있으므로
 - 가구단위 선택 이유: 지급액 수준과 명칭 등 제도 성격을 고려, 다탈아의 양육비 차등 지원 필요성 감안, 가구단위가 현실적, 지급단위와 소비단위의 일치성

* 일부는 시설보호 아동에 대한 지급은 불필요하다는 의견 제시하였으며, 아동 단위가 적절하다고 응답한 전문가들의 의견 중에서도 다자녀 혹은 다태아 가구 지급 방식에 대한 의견 상이(일부는 다태아에 대해서는 금액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있어 함께 제시)

2. 부모급여 제도 설계에 대한 의견

부모급여 지급 시 부모교육 연계

- 부모급여 지급 시 부모교육이 아니라 다양한 양육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응답이 41.4%로 가장 높았으며, 의무적으로 부모교육 이수 31.0%, 부모교육 연계가 전혀 필요 없다는 응답 13.8%
 - 다양한 양육 정보 제공 선택 이유: 현재 부모교육 콘텐츠의 한계로 질을 담보하기 어려움, 다양한 양육 관련 정보 제공이 정책 집행의 수월성을 높임.
 - * 구체적으로 부모급여 신청 시 양육관련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얻고 앱 등을 통해 양육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 제시

- 부모교육 의무적으로 이수 선택 이유: 부모급여의 '성격'을 고려, 부모급여의 수급은 부모역할을 이행해야 함을 의미하므로, 자녀 돌봄의 책임 인식시킬 필요, 자발적인 부모교육 참여가 거의 없을 것이므로 의무적인 연계가 필요

* 부모급여 지급 시 부모교육 이수 가능한 체계 구축에 대한 제안

3. 부모급여의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부모급여의 기대효과

- 전문가들의 보는 부모급여의 가장 큰 기대효과는 '영아 가구의 양육비 부담 완화'로 5점 만점에 평균 4.4점으로 나타났으며, '영아가구의 기본적인 소득보장'은 4.1점, '영아를 둔 부모의 육아 관련 선택의 자유 보장'는 평균 3.1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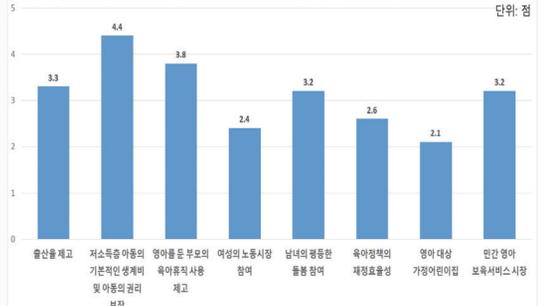
<표 7> 부모급여의 기대효과에 대한 전문가 의견

구분	단위: %(명), 점					평균	계(수)
	전혀 효과 없음	거의 효과 없음	다소 보통	매우 효과 있음	매우 효과 있음		
영아를 둔 부모의 육아 관련 선택의 자유 보장	13.8	20.7	24.1	27.6	13.8	3.1	100.0 (29)
영아가구의 양육비 부담 완화	-	-	14.3	35.7	50.0	4.4	100.0 (28)
영아가구의 기본적인 소득보장	-	3.6	14.3	46.4	35.7	4.1	100.0 (28)

부모급여의 파급효과

- 가장 큰 파급효과로는 저소득층 아동의 기본적인 생계비 및 아동의 권리 보장 효과가 5점 만점에 4.4점으로 나타났으며, 영아를 둔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 제도가 3.8점, 출산율 제고는 3.3점 순으로 나타남.

[그림 2] 부모급여의 파급효과 정도에 대한 전문가 의견



3. 부모급여의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부모급여의 부정적 파급효과

- 영아 대상 가정어린이집(29.6%) 선택 이유: 부모급여 도입으로 부모들이 직접 돌보면서 현금급여를 모두 지급받는 것을 선호하여 기관이용의 수요(가정어린이집 이용률) 크게 감소, 영아대상 가정 어린이집의 재정난 악화 가능성, 영아 대상 가정어린이집의 질 하락
-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22.2%) 선택 이유: 부모급여가 주로 여성들이 영아 돌봄을 전담하도록 유도할 높은 가능성, 특히 저소득층 여성들의 노동시장 이탈, 영아 보육서비스 악화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악영향
- 민간 영아 보육서비스 시장의 확대(18.5%) 선택 이유: 부모급여가 민간 보육시장에 유입되어 돌봄 시장을 활성화, 보육비 사용의 계층 간 격차 확대, 경제적 논리에 따른 육아환경 강화, 필수 서비스보다 불필요한 시장 형성할 가능성, 영아 보육서비스의 위축으로 귀결

4. 유관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

부모급여 도입시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정책 및 서비스

- 육아휴직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69.0%
 - 부모급여 도입이 부모의 직접 돌봄 욕구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측되며, 이를 위해 육아휴직제도를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
- 시간제 보육 서비스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8.6%, 영아 가정 어린이집의 질적 제고도 44.8%로 나타나 영아 대상 양질의 보육서비스의 필요성 강조
- 전문가들은 가정양육 증가에 따라 양질의 가정양육을 위한 지원 개선이 필요하다고 봄.
 - 충분한 가정양육 정보 제공 서비스 개선이 48.3%, 가정방문서비스 확대 41.4%, 가정양육 지원 서비스 확대를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접근성 제고 및 프로그램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응답 41.4%, 부모 상담 서비스의 접근성 제고 34.5%

<표 8> 부모급여 도입 시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정책 및 서비스(복수응답)

구분	응답
영아 가정 어린이집의 질적 제고	44.8
시간제 보육 서비스 확충	58.6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및 비용 지원	20.7
육아종합지원센터 접근성 제고 및 프로그램 활성화	41.4
육아휴직제도의 실질적 이용을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69.0
부모교육 강화	17.2
부모 상담 서비스의 접근성 제고	34.5
가정방문 서비스 확대	41.4
가정양육 관련 충분한 정보 제공	48.3
가정양육 실태조사 강화	34.5
민간 영아보육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감독	31.0
기타	6.9
(수)	(130)

4. 유관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

부모급여 도입 시 가정양육수당 제도 개선

- 가정양육수당의 지급연령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56.5%로 현행 유지보다 높게 나타남.
 - 하향조정 의견 중 24개월까지 지급 의견이 42.9%, 폐지 의견이 35.7%
- 지급액은 현행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54.5%로 가장 높았으며, 지급액 하향조정을 응답한 응답자는 모두 폐지 의견을 제시
 - 상향 의견에서는 만 2세만 상향조정 또는 연령에 따라 단계적 감액 등의 의견 제시

부모급여 도입 시 아동수당 제도 개선

- 아동수당 지급연령 상향조정인 76.9%, 현행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23.1%
 - 상향조정 의견 중에 만 18세까지가 45%, 만 12세(초등학생까지)가 25%, 이외에 만 16, 17세 의견이 있었음.
- 아동수당 지급액 상향조정이 55.6%, 현행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44.4%
 - 월 20만원과 월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점진적 조정 의견에 각각 26.7% 응답
 - 월 15만원과 월30만원에 각각 13.3% 응답

4. 유관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

부모급여 도입 시 육아휴직제도 개선

- 육아휴직제도 개선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항을 질문한 결과, 1순위에서 육아휴직 관련 기업 인센티브나 강제조치 확대 25.9%, 육아휴직급여의 급여 상한액 조정 22.2%
- 1, 2순위 합산 응답에서는 육아휴직 관련 기업 인센티브나 강제조치와 함께 사회보험 방식의 부모보험 제도 도입이 37%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고용보험가입과 상관없이 지급되는 육아휴직 기본급여 제도 도입 추진이 33.3%, 육아휴직 의무 사용 기간 부여가 25.9%

<표 9> 육아휴직제도 개선을 위한 우선 추진 사항

단위: % (명)

구분	1순위	2순위	1+2순위
유급 육아휴직 기간 조정	3.7(1)	-	3.7(1)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를 조정	3.7(1)	18.5(5)	22.2(6)
육아휴직급여의 급여 상한액 조정	22.2(6)	-	22.2(6)
육아휴직 의무 사용 기간 부여	18.5(5)	7.4(2)	25.9(7)
육아휴직 관련 기업 인센티브 또는 강제 조치 확대	25.9(7)	11.1(3)	37.0(10)
고용보험가입과 상관없이 지급되는 육아휴직의 기본급여 제도 도입	18.5(5)	14.8(4)	33.3(9)
사회보험 방식으로 모든 부모에게 지급되는 부모보험제도 도입	-	37.0(10)	37.0(10)
기타	7.4(2)	11.1(3)	18.5(5)
(수)	(27)	(27)	(54)

04

부모급여 도입 시 쟁점 및 과제

1. 주요 쟁점
2. 정책과제

1. 주요 쟁점

부모급여 제도의 성격 규정

- 부모급여 제도가 어떠한 정책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며, 기존의 수당 제도와 어느 지점에서 차별성을 가질 것인지에 대한 숙고 필요
 - 영아가구의 양육비 부담 완화와 낮은 소득 및 소득 상실에 대한 소득 보장을 강화할 목적으로 실시되는 수당제도이나, 제도명에서 부모에 대한 지원임을 명시하였으므로 부모권 강화에 대한 논의가 뒷받침될 필요가 있음.
- 부모급여의 기대효과로 아동 빈곤의 해소와 육아휴직 사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
 - 단, 육아휴직제도의 사용을 제고 및 사각지대 해소가 선결과제

보육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

- 영아 공공 보육서비스 약화: 부모급여의 지급은 직접 돌봄을 하고자 하는 부모들이 가정양육을 유도하고, 기관이용 수요를 감소시킬 것으로 예측되므로 영아 대상 가정어린이집의 이용률이 크게 감소할 수 있으며, 이는 가정어린이집의 재정 및 운영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양질의 영아 공공 보육서비스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급여가 민간 돌봄서비스 시장으로 유입되면, 민간 시장에서 돌봄 비용 증가 및 양극화, 돌봄 질 확보의 어려움 발생 우려

1. 주요 쟁점

여성 고용 및 돌봄 불평등성에 미치는 영향

- 부모급여가 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직접 돌봄 시 소득을 보장하는 정책으로 작동하는 이면에, 여성의 경력단절이나 가정 내 돌봄의 성별화, 계층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특히 저소득 여성의 경우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담 돌봄을 하게 될 수 있음.

부모급여의 목적 부합성

- 보육료 수준 이상의 높은 보편 정액급여인 부모급여는 이전보다 영아의 양육비 부담을 크게 완화하고 가구의 소득을 보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나, 현금급여의 오남용 문제와 의도치 않게 양육 부담을 가중시켜 정책적 효과를 축소할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
 - 자녀돌봄 관련 현금급여의 도입 시 부모교육이나 부모상담 등 부모가 자녀를 적절히 양육할 수 있도록 양육지원서비스 강화 필요
 - 기본적으로 영아 보육서비스의 실수요를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공급을 확보하고 질 제고를 위한 노력 병행 필요

2. 정책 과제

공공 영아 보육서비스 강화

- 영아 어린이집 지원 방안 마련 및 접근성 강화
 - 영아 대상 가정어린이집을 시간제 보육 확대에 활용
 - 영아 대상 가정어린이집의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 국공립이나 공공형 어린이집을 영아 보육에 활용
- 가정양육 시 이용 가능한 보육서비스 확대
 - 시간제 보육서비스 확대
 - * 보건복지부 “시간제 보육 통합형 시범사업”(2022년 9월~) 실시 중
 - 영아 대상 아이돌봄서비스 강화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접근성 제고 및 서비스의 다양화

육아휴직제도의 포괄성 및 이용을 제고

- 육아휴직제도의 광범위한 제도적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직장 규모나 고용형태에 따른 육아휴직제 사용의 계층화 현상 지속
- 당연한 부모의 권리로 수용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방안 필요: 보다 확대된 인센티브 제고와 거부 또는 부당한 처우 시 패널티 제도 강화

부모 대상 가정양육 지원 서비스 확대

- 부모급여로 부모의 가정양육 증가가 예측되는 바, 가정양육의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돌봄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에 따라 부모 상담 및 가정방문형 서비스 제공
-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을 연계한 가정양육 지원 서비스 개발 필요

2. 정책 과제

취약한 영아기구 대상 지원 강화

- 부모급여가 보편 정책 급여로 일괄 지급되더라도 소득보장이나 추가 지원의 요구도가 높은 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 가구소득별 지원 방안에 고려 필요
 - 향후 1세 부모급여를 취약 가구에게만 다소 상향조정 가능
 - 추가 서비스 비용에 대한 감액이나 비용 지원
 - 초고소득 가구의 경우 부모급여를 가구소득 산정에 포함시키는 등 세제 개편 시 고려하는 방안 등

중장기적 정책 과제

- 통합적 법적 기반 마련
 - 현재 부모급여 실시를 위해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 (의안번호-16957) 되었음(아동수당법 제4조제5항)
 - 그러나 부모급여 도입 등 부모의 양육 관련 현금지원뿐만 아니라 부모의 전반적인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서비스를 포괄하여 분절적인 양육지원 체계를 통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
- 수당제도의 개편
 - 부모급여 도입을 계기로 전반적인 현금지원 체계를 검토하여, 가정양육수당의 축소 또는 폐지를 추진하고, 아동수당은 지급연령이나 지급액을 제도 목적에 부합하게 상향 조정 필요

감사합니다.



종합토론

좌장: 문무경 실장(육아정책연구소 국제교류·데이터정책연구실)

이병래 회 장 |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장화정 본부장 |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보호본부

전효정 회 장 | 한국아동학회

정정희 회 장 | 한국유아교육학회



‘새 정부 육아정책 과제에 대한 국민의견’에 대한 토론

이병래 회장 |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1. 들어가는 말

- 연구 결과에 수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다.
- 연구 결과를 보면서 수 많은 생각들이 맴돈다.

2. 나타난 연구 결과

1) 많은 이야기들: 제시된 국정과제들의 성격과 국민의견

- 부모와 전문가의 공통점과 차이점
 - 공통점: 요구도가 모두 높다. 유의미한 수준에서
 - 현금 및 의료비 지원
 - 돌봄(유아교육·보육·초등)
 - 자녀돌봄 시간지원
 - 차이점: 우선순위 차이

부모 인식(표 IV-2-5, 표 IV-2-6)	전문가 인식(표 IV-2-7)
① 현금 및 의료비 지원: 부모급여(37.5), 의료비 지원(15.5)	① 자녀돌봄 정책(67.3)
② 자녀돌봄 시간지원: 돌봄 확대(5.6),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5.4)	②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17.3)
③ 식생활 건강권(4.8), 보육서비스 질 제고(4.7)	③ 현금 및 의료비 지원(15.4)
※ 유보통합(0.6), 가정방문 지원(0.7): 관심 약함	

2) 향후 정책방향 우선순위

- 상위 우선순위
 - 유보통합(27.9)
 - 부모급여(18.3), 보육서비스 질 제고(18.3)
 - 사립유치원 교사처우, 유-초 연계성 강화 추진(7.7)

- 하위 우선순위
 - 아이돌봄서비스(1.0), 식생활 건강권(1.0), 건강지원(1.0)

3. 연구 결과에 대한 고찰

1) 육아정책 관련 국정과제의 특징

- 경제적-물질적 결핍육구 지원 관련 과제들
 - 저출산 위기, 부모 지원, 아동보호 관련

2) 아동의 정신적 성장육구와 관련된 과제가 없다.

- 교육 및 보육에 대한 미래 비전
 - 어떤 사람으로 길러야 하는지 : 방향
 - 어떤 방법으로 보육하고 교육해야 하는지 : 방법
 - 어른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지 : 지원

3) 저출산 해소 정책에 대한 의문

- 저출산 해소 정책의 논리적 정합성은 무엇인가?
 - 무엇을 해결하기 위한 출산 정책인가?
- 여기에서 아이는 어떤 존재인가?
 - 미래 사회에서 아이들은 어떤 존재인가?

4. 나가는 말

- “인간은 빵만으로 살 수 없다” (톨스토이)
 - 육아 정책은 결핍육구 충족만으로 완성되는가?
 - 결핍육구는 회복을 위한 기본 육구일 뿐이다.
- 국정과제는 누가 제안했는가?
 - 학자 또는 전문가들 아닌가?
 - 육아정책은 관련학자와 전문가들의 paradigm에 따라 다른 곳을 보고 다른 길을 가게 될 것이다.
- 이런 유아교육정책이 활발하게 연구되고 제안되기를 기대한다.
 - 대한민국의 유아들이 어떻게 하면 보다 인간다운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
 - 대한민국의 유아들의 삶이 어떻게 하면 보다 행복할 수 있는가?

- 대한민국 어린이들이 미래인류문명사회를 선도하는 세계적 리더(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떤 교육적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해야 할까?
- 세상의 모든 어린이가 행복하고, 그들이 살아가는 미래사회가 건강했으면 좋겠다.
 - 이것이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가장 소중한 역할인 것 같다.
 - 특히 어린이의 삶과 관련된 학자들과 전문가들에게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장화정 본부장 |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보호본부

부모급여 제도의 쟁점 및 정책과제에 관한 토론

전효정 회장 | 한국아동학회

새 정부는 부모의 양육 부담 완화,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저출생 위기 극복 등을 위해서 부모급여를 신설하여 지급하는 안을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그동안 범국가적인 저출산 대응에도 불구하고 가족지원은 미흡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생애 초기 발달의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부모급여의 도입은 의미 있는 정책적 진전이라고 보여진다. 정책의 효과가 사회 전체의 인식기반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부모급여제도의 성격을 규명하고, 기대효과와 파급효과 및 시행에 따른 유의점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은 시의적절하고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부모급여 제도는 영아기 돌봄부담 완화 및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만 0-1세 영아의 양육자에게 현금급여의 방식으로 실시된다. 본 제도는 그 도입의 근거가 되는 ‘영아가구의 자녀양육 양상 및 욕구와 양육비 및 소득 분석 결과’에 대한 발표내용을 토대로 본다면 적절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발표내용에서 살펴보면 영아 부모 중 다수가 기관보육보다 가정 양육을 선호하고, 정부의 지원 방식 선호조사에서도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현금지원이 적합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러한 점에서 부모급여제도는 수요자의 요구(needs)에 적합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부모급여 제도는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이라는 국정과제의 실현에도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생애 초기의 따뜻하고 민감한 밀도 높은 양육 즉 질 높은 양육환경은 가정환경에서 실현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 출생, 신생아시기, 그리고 스스로 조금이라도 일상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만 2세까지는 개별적인 생활리듬, 개별적인 욕구의 차이가 매우 큰 시기라서 집단 양육이 부적절하므로 각 가정에서 편안하게 개별 영유아의 특성에 따른 하루일과를 보내는 것이 건강한 발달을 보장한다.
- 아동 및 인간의 평생 건강한 성장의 기초 중 하나인 양육자와의 안정적인 애착 형성을 위해서 영아기에 가정 양육이 더 효과적이다. 또한 영아기의 확고한 부모역할에 대한 관점과 양육 기술을 확립한다면 이후 발달시기에도 보다 효과적인 부모 역할을 할 수 있다.
- 가정 양육이 집단 양육보다 더 안전하고 위생적일 확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감염으로부터도 안전한 환경이다.

다음으로, 부모급여제도는 상대적으로 소득 부분이 취약한 영아 가구의 돌봄 부담 완화와 소득 보장 강화에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

- 임신, 출산, 자녀 양육으로 인한 비용이 많고 부모가 직장에서의 지위 등을 토대로 볼 때, 자녀의 연령이 낮을수록 가구소득이 하위 30% 구간 속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최효미 외, 2021) 부모급여는 영아 가구에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 발표내용에서도 추정되었듯이, 2024년 기준 1분위~3분위에서 부모급여가 양육비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저소득층에서 부모급여로 인한 소득보전효과의 체감도가 클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부모급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와의 연계성 및 사각지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에 발표자의 '부모급여 도입시의 쟁점과 과제'의 내용에 기반해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부모급여제도가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기존의 육아휴직 제도를 살펴보고 수정 보완해야 한다. 현재 육아휴직이 1년으로 제시되어 있지만 모든 직장에서 다 운영하는 정책이 아니며 부/모 각각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이 또한 모든 직장에서 가능한 일이 아니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이나 개인사업자, 가정주부의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스웨덴 등의 선진국의 육아휴직 제도들을 토대로 급여지급, 휴가 기간 사용 등의 세부적인 지침을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모든 부/모가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

둘째, 영아의 가구 배경이나 지역 등 계층별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을 고려, 돌봄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모급여는 특히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여성들이 전담 돌봄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노동시장 이탈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부모급여는 영아의 가정 양육을 유도함으로써 영아 대상 기관의 재정과 운영의 악화로 인한 보육의 질적 하락을 야기할 수 있다. 이는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 영아들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공평한 출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취약한 영아 가구 대상에 공공 보육 인프라와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셋째, 부모급여제도가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가정 양육의 질적 수준이 높아질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 의무적으로 부모교육에 참여하도록 하는 등 부모교육제도가 병행되어야 한다.
- 최근 아동권리존중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는바, 초기 부모시기부터 자녀의 권리를 존중하는 양육에 대한 부모교육이 이루어진다면 건강한 양육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아동

학대 예방 효과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양육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 난무하는데 이것들에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도 많다. 따라서 국가가 제시하는 부모교육을 통해 부모가 우선적으로 알아야 하는 지식 및 기술을 학습하도록 함으로써 건강한 부모역할 및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부모교육의 매체와 내용을 다양화하는 전략과 MZ세대의 부모를 위해 그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양육역량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시간제보육’과 같이 육아를 담당하는 부/모를 실제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24시간 돌봄을 받아야만 하는 영아기 자녀의 양육은 모든 부모에게 힘들고 부담스러운 일이다. 이런 육아의 어려움으로 인해 부모가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음으로써 자녀를 방임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으며 자녀 출산을 기피하기도 한다. 따라서 부모가 전담하여 자녀를 양육 하더라도 부모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시간제보육’과 같은 제도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넷째, 영아기 가구만을 지원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모 양육 부담 완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돌봄 정책 효과 및 저출생 위기 극복에는 도움이 되지 못할 수 있다.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린 연령 뿐만 아니라 초등, 중고등학교 시기에도 여전히 돌봄이 필요하다. 그런데 양육을 위한 현금지원은 영아기에만 편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2018년부터 아동수당 월 10만원 0~5세 아동(소득재산 기준 하위 90%)에 대해 선별적으로 지급하기 시작하여 2021년에는 7세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출생 아동을 대상으로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지급, 영아 수당 월 50만원 지급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바, 청소년기의 경제적 지원은 심각한 공백 수준이다(박선권, 2022, 재인용).

또한,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출산을 기피함을 보완하기 위해서 출생 후 3년만 지급되는 부모급여제도는 턱없이 부족하므로 저출산 위기 극복에는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한편, 부모급여제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임신·출산 지원, 영유아~아동 양육, 보육 및 돌봄, 건강 관리지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부모 양육 부담 완화,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저출산 위기에 대비하는 것이다. 즉, 돌봄의 질적인 수준이 핵심이라 할 수 있다“새 정부 육아정책 대한 국민의견”연구에서 윤석열 정부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정책 중 가장 중요도가 큰 것은 부모, 전문가 모두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로 나타났는데, 이는 영유아기에 안정된 육아 환경과 일·가정 병행, 약화된 가족기능 본안을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는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교사 대 아동 비율, 시설면적 상향 검토, 부모교육과 시간제 보육 개선으로 양육지원 강화 방안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 김연진(2020). 스웨덴의 육아휴직: 모든 부모의 권리. **국제사회보장리뷰**, 2020 여름호 Vol, 13. p126-135.
- 김은설, 최윤경, 권미경, 최효미, 김나영, 김자연, 박은영 (202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 조사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박선권(2022). 부모급여 신설의 타당성 제고방안. 이슈와 논점, 1998호. 국회입법조사처.
- 최효미, 이정원, 김자연, 이재희, 김태우(2021).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유아서비스수요연구(IV).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 생태계 포럼: 윤석열 정부의 육아정책 국정과제 이행방향 토론

정정희 회장 | 한국유아교육학회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육아정책 생태계 포럼을 개최하여 윤석열 정부의 육아정책 국정과제이행방향을 주제로 다루는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매우 시의적절한 것이라 봅니다. 육아정책 생태계 포럼은 현재 초저출산 현상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육아정책 생태계를 다시한번 점검하고 현 정부의 육아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고 뜻깊은 토론회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급변하고 있는 세계정세와 저출산 고령사회, 그리고 디지털 전환시대의 특성들은 유아교육과 보육분야에도 깊이 영향을 미치고 있어, 초저출산 시대에 대응 하기위한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며, 무엇보다 국가의 근간이 되는 육아지원 정책을 제대로 수립하기 위한 육아 생태계 정립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 정부는 국가정책의 기본방향으로「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강조하였으며, 육아정책 관련 공약선정단계에서도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육아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같은 맥락에서 유아교육과 보육정책관련 국정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과제들을 살펴보면, 아이 돌봄 서비스,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 처우개선, 단계적 유보통합 추진, 돌봄 서비스 확대 및 돌봄 서비스 통합 AI 플랫폼 구축, 영유아 친환경 급식제공 및 영아반 교사아동비율축소, 아동학대 방지 전방위 시스템구축, 영유아 발달전문가 파견 등이 있습니다. 현 정부가 제시한 육아지원정책 관련 공약과 국정과제들은 저출산 문제해결 뿐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영유아들의 출발선 평등과 행복한 삶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 육아정책 수립과 육아정책 관련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서 부모와 영유아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육아정책 과제에 대한 지속적인 의견수렴과 평가를 통해 육아정책 방향을 설정

○ 현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제시한 육아정책은 크게 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 현금/의료비지원정책, 시간지원정책으로 나누어볼 수 있음.

- 육아정책 국정과제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부모나 관련전문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육아정책에 관한 의견을 적절하게 수렴함으로써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육아정책 관련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지속적인 목표 달성여부 모니터링 및 평가가 필요함

- 미래지향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육아정책 생태계 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육아지원정책이 저출산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과 동시에 미래인재양성의 기초가 되는 유아교육·보육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가운데 영유아들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 시대적 특성과 변화하는 사회환경을 고려하는 바람직한 육아정책 생태계 구축과 육아정책의 목적 및 개념, 방향성 재정립 필요

○ 디지털 전환, 코로나 19, 기후변화, 저출산 등 육아를 위한 주변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시점에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육아정책 생태계구축이 필요함

- 출산과 육아, 유아교육과 보육 및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강화와 미래지향적 육아지원정책으로의 개편을 통해 저출산 문제해결과 영유아의 출발선 평등 및 행복한 삶을 누릴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단기적인 정책이행보다 거시적이고 장기적 차원에서의 계획 수립 후 구체적인 정책실행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함

- 그동안 저출산 정책과 돌봄 정책 등 다양한 육아정책들이 펼쳐져 왔으나 출산율제고에는 큰 기여를 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초저출산 현상이 더욱 심화되는 것을 볼 때, 육아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제시된 육아정책에 대해서도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 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 다른 나라의 육아정책 사례들을 참고하되 현재 우리나라 부모들과 영유아가 처한 환경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육아정책 생태계의 개념 정립과 목표설정이 필요하며, 목표설정 후 구체적인 정책실행을 위한 세부 목표와 추진 전략 수립이 필요함
- 세 가지로 나눈 육아정책(유아교육·보육·돌봄정책, 현금/의료비지원정책, 시간지원정책)이 서로 연결되고 일관성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통합적 육아정책 추진이 이루어져야 하며, 유아교육·보육정책의 방향 및 목적 및 목표와도 연계성을 가지고 추진될 필요가 있음

□ 육아지원정책 과제 이행을 위한 제도의 장단점 분석 및 지속적인 보완 필요

○ 정부에서 제시하는 육아지원정책이 실질적으로 효과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다양한 여론수렴 및 정책연구 과정을 거쳐서 지원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보완되는 것이 필요함

- 다양한 육아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제도의 장점과 함께 문제점도 나타날 수 있음. 부모 급여 제도의 경우에도 부모의 소득보장, 부모 양육비 부담 완화, 아동 빈곤해소와 같은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으나 동시에 이 제도가 영아 공공보육서비스 약화나, 여성 고용 및 돌봄 불평등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양육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음
- 따라서, 육아지원제도가 가진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는 가운데 부정적 측면을 보완하고 정

책과제의 방향을 수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며, 새로운 정책과제를 통해 제도를 보완하면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함

- 육아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해서 관련되는 다양한 육아정책 관련 주체들, 예를 들면 부모, 교사, 지역사회, 기업체, 지자체, 중앙정부 등이 육아정책에 관한 인식을 공유하는 가운데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새로운 정책에 대한 책임감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함

□ 저 출산 문제는 경제적 요인, 사회 문화적 요인, 종교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다는 점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육아지원정책에서도 경제적, 시간적 지원과 같은 물질적 측면의 지원 뿐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인 지원과 같이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 현재 육아정책 가운데 경제적, 인적, 시간적 지원 등 물질적인 부분들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이 주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측면 이외에도 출산과 양육을 담당하는 엄마와 그 가정에 대한 심리적, 정신적 측면에서의 지원도 중요함
- 부모를 위한 건강의료비 지원, 건강 및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들을 제공해줄 필요가 있음
- 육아지원정책에서 아이를 중심으로 양질의 육아지원, 돌봄, 교육·보육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나, 양육의 주체인 엄마들을 고려한 지원정책이 강화되고 보완될 필요가 있음
-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확대하여 육아에 대한 국가의 공적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제고 및 돌봄 서비스 질 강화가 필요함. 이를 위해 적절한 교사대 아동 수, 환경개선, 교사의 질 향상 및 처우개선, 질 높은 교육과정 제공, 안전한 실내외 환경 등이 제공되어야 함.
- 지속적으로 유아교육과 보육 서비스 질을 높이고 우수한 교사양성을 통해 차별 없는 교육·보육·돌봄이 제공되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이원화 체제로 운영되어 오던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이 이루어져야 함

